

# 65

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와 2020년 전망

2019. 11

**IFES**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2019-3 (No. 65)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IFES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2019-3 (No. 65), 2019. 11

**한반도 정세: 2019년 평가와 2020년 전망**

사 회 : 이 관 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발 표 : 왕 선 택(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이 제 훈(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장 용 훈(연합뉴스 한반도부장)

토 론 : 장 세 정(중앙일보 논설위원)  
구 자 룡(동아일보 논설위원)  
안 정 식(SBS 북한전문기자)  
이 상 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조 진 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 동 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일 시 : 2019년 11월 28일(목), 09:40~12:00

장 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1층)



I F E S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목 차

<b>I. 주제발표</b> .....	<b>5</b>
1. 북미관계: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 7 왕선택(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2. 남북관계: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 21 이제훈(한겨레신문 선임기자)	
3. 북한 내부 정세: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 49 장용훈(연합뉴스 한반도부장)	
<b>II. 토론</b> .....	<b>57</b>
1. 북미관계: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장세정(중앙일보 논설위원)	
2. 남북관계: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 59 구자룡(동아일보 논설위원)	
3. 북한 내부 정세: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 65 안정식(SBS 북한전문기자)	
4. 미중관계: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 73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5. 한일/북일관계: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 85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6. 북미 협상: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 97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b>※ 통일전략포럼 보고서/자료집 발간 목록</b> .....	<b>103</b>
<b>※ 회원가입 안내</b> .....	<b>117</b>



## I . 주제발표

북미관계: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왕선택(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남북관계: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이제훈(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북한 내부 정세: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장용훈(연합뉴스 한반도부장)





## 북미관계: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왕 선 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북한학 박사)

### ◆ 2019년 북미 관계 개관

- 2019년 북미 관계는 협상 국면이 유지됐지만, 비핵화나 관계 개선 측면에서 구체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2018년 외교 성과가 컸고, 2019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한 조건에서, 1년 내내 기대와 실망이 주기적으로 큰 폭으로 교차하면서 피로감과 불투명성 가중.
- 2019년 북미 관계는 3개의 큰 행사, 즉 2월 말 하노이 정상회담, 6월 말 판문점 깜짝 회동, 10월 초 스톡홀름 실무 협상 중심으로 진행.
-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협상 전략을 수세적, 협조적에서 공세적, 대결적으로 변경. 협상 의제로 대북 제재 해제와 비핵화를 교환하는 방식에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필두로 안전보장 조치와 제재 해제로 재편. 협상 전술로 벼랑끝 전술 채택. 여러 차례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긴장감 고조.

- 미국은 비핵화 관련 원칙적 자세와 대북 제재를 견지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향을 고려하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관리하는데 집중.
- 한국은 2월 말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나면서 북미 협상에서 중재자 역할 동력 크게 상실. 6월 말 판문점 깜짝 회동이 있었지만, 북한과의 소통을 복원하지 못하면서 운전자나 중재자 역할은 종식하고 촉진자 역할을 모색하는 상황.

## ◆ 북한의 대미 협상 전략 변경과 자력 갱생

### 1) 하노이 회담 결렬과 정책 재검토

- 북한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는 상황까지 노동당 통일전선부 주도로 미국과의 협상을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남한과 협력하는 양상도 노출.
- 하노이 회담을 겨냥한 북한의 협상 전략은 ‘영변 방안’ 즉 비핵화 조치와 대북 상응 조치를 동시적, 단계적으로 전개한다는 개념 속에서 우선 1단계 조치로 영변 핵 시설 폐기 방안을 제시. 북한이 영변 핵 시설 단지를 영구히 폐기하고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 경제 제재 가운데 민생 분야를 해제하는 방안을 맞교환하는 방식.
-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 방안’이 관철될 것으로 전망하고 낙관적인 태도 노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거부하자 충격을 받고 실망하는 모습 노출. 이후 결렬 원인 분석에 착수.

## 2) 하노이 협상 정책 검열과 협상 전략 변경

- 북한은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북미 협상 과정에 대한 정책 검열 결과 협상 조직 효율성과 협상 전략 내용, 협상 방식 등에서 정책 오류가 있다고 보고 대대적인 수정 착수.
- 협상 조직 문제로는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주도하는 방식에 결함이 있다고 보고 협상 주도 기관을 외무성으로 교체. 협상 최고 책임자를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으로 교체. 통전부가 대미 협상 업무에서 빠지면서 남측 조언을 참고하는 방식도 퇴출.
- 협상 전략 재검토에서 미국이 거부한 ‘영변 방안’은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남측 진실성과 외교 역량에 대한 의문을 제기. 영변 방안의 경우 안전보장 문제를 우회하고 제재 해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북한이 불필요하게 협상력을 스스로 약화한 것으로 판단. 이에 따라 안전보장 문제, 즉 대북 적대시 정책 완전 철회를 우선 제기하면서 제재 해제 문제를 병행 제기. 이와 관련 생존권과 발전권 개념을 전면에 배치.
- 협상 방식에서도 이전에는 남측 조언을 참고해 미국에 대해 온건하고, 협력적이며 편승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정책 검열 이후 상대방을 극단적인 언행으로 강압해서 최대 양보를 받아내는 벼랑 끝 전술로 회귀. 5월 4일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군사적 긴장감을 서서히 높이는 행보 착수.

## 3) 판문점 깜짝 회동과 연합 군사 훈련 반발

-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의 6.30 판문점 깜짝 회동 제안 수용하면서 반전 가능성 모색. 53분간 진행된 정상 대화를 통해 핵

담판을 통한 정세 반전 가능성을 재확인하면서 실무 협상 재개 합의. 특히 8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

-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일부 규모와 언론 노출만 줄었을 뿐,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반발. 북한은 한미 연합 군사 훈련 긴장감을 고조시키면서 미국을 압박하는 기회로 활용한 것으로 분석.
-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국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현재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력 경쟁을 통한 소규모 경제 발전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도움을 받는 중 규모 경제 발전을 잠재적 대안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

#### 4) 스톡홀름 실무 협상과 최대 압박

- 북,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종료와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 발언 등을 확인하고 9월 초 실무 협상 복귀 의사 제시.
- 협상장에서 미국 입장 경청했지만, 협상이 종료되고 난 뒤에는 미리 준비한 문건을 낭독하면서 협상 결렬 선언. 벼랑끝 전술 사용하면서 미국에 안전보장 문제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촉구.
- 북한은 연말 또는 새해 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이 원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외교적 압박이나 유인 노력을 계속 전개할 것으로 예상.

## ◆ 미국의 대북 협상 전략과 외교 업적 관리

### 1) 하노이 회담 결렬과 미국 국내 정치 변수

- 하노이 회담이 성사되는 과정에서 미국은 유연한 태도 표명.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월 31일 스탠포드 대학 특강에서 미국은 동시적이고 병행적 태도 언급. 포괄적 핵 실험 신고 시점도 유연한 대응 시사.
- 미국 외교, 안보 분야 주류 엘리트는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영변 핵 시설 단지를 폐기할 의사가 있다는 언급에 반응. 영변 단지 폐기는 대단한 것이 아니라면서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한다는 여론 조성. '영변 방안'이면 스몰 딜(small deal), '모든 핵 관련 시설 폐기 합의'라면 빅 딜(big deal)로 부르고, 스몰 딜은 배드 딜(bad deal)인 만큼 차라리 노딜(no deal)을 택해야 한다는 프레임 조성.
- 하노이 회담 기간에 미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언이 출석해 증언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평정심 동요 조짐.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건의를 수용해 빈손 거래 채택.
- 미국은 이후 상황 관리에 주력. 온건파에 속하는 비건 대표도 하노이 회담 직후인 3월 11일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점진적인 방식이나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2) 판문점 회동으로 북핵 문제 해결 관심 부활

-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에게 6월 30일 한국을 방문하는

계기에 판문점에서 만날 것을 트위터로 제안. 김정은 위원장이 동의해서 깜짝 회동 성사. 두 정상, 실무 협상 2,3주 이내 재개 합의.

- 미국은 8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 훈련과 관련해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자 규모를 축소하고 명칭을 변경하면서 부분적으로 북한 달래기에 나섰지만, 훈련 자체는 강행. 결국 실무 협상 재개 지연.
-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을 추진한 것은 유명 인사로써 자신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을 확인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 방문을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과 노벨상에 대한 관심 부활 추정.

### 3) 존 볼턴 보좌관 해임으로 북미 협상 분위기 고조

- 9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로 볼턴 보좌관 해임으로 북미 협상에 긍정적인 변화 발생. 9월 9일, 최설희 외무성 제1부상은 실무 협상 참가 용의 발표. 북한이 볼턴 보좌관 퇴진을 예지했는지 불투명.
- 트럼프 대통령은 8월 중 5차례에 걸쳐 진행된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일상적인 군사 활동 수준이라면서 용인 발언 잇따라 제기.
- 폼페이오 장관의 경우는 대북 비판 발언을 자주 제기했지만, 북한은 트럼프와 폼페이오 발언에 분리 대응하는 방식으로 협상 가능성 관리.
- 비건 대표, 스톡홀름 실무 협상에서 진지한 태도로 미국의 협상 방안을 설명. 협상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실무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기 중.

#### 4) 연합 공중 훈련 중단으로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 부상

- 11월 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기자회견에서 연합 공중 훈련 중단 결정 발표. 이에 앞서 11월 13일 밤, 북한은 국무위원회 대변인 명의로 담화를 내고 연합 공중 훈련 중단을 강력히 요구.
- 미국의 훈련 중단 조치는 북한의 극단적 압박에 맞대응하지 않고 순응하는 것으로 북한을 실무 협상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강력한 양보 조치로 평가. 미국이 적극적인 유화 조치에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을 성공시켜서 노벨상을 수상하거나, 내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정책 성과로 제시할 수 있는 외교적 업적이 필요하다는 정책 수요에 부응한 것으로 분석.
-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 조치는 점차적으로 강해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가능하면 조기에 정상회담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이 조바심을 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요구 수준을 점차 올리는 특징 노출.

### ◆ 한국의 촉진자 역할 축소와 북미 협상 전망

#### 1) 한국 중재자 노력, 하노이 회담에서 ‘새옹지마’

- 한국, 북한과 미국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지난해 하반기에 9월 남북 정상회담 계기로 ‘영변 방안’을 제시해 북한의 태도 변화 유도.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영변 방안’ 포함해서 김정은 위원장 비핵화 의지 강조하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 분위기 고조.
- 한국, 11월 중 북미 고위급 회담 취소 이후 ‘영변 방안’ 중심으로

미국 측 지지와 협력 설득. 스티븐 비건 대표의 긍정적 반응과 트럼프 대통령의 협력 반응으로 2019년 1월 중순 김영철 당 부위원장 워싱턴 방문 성사.

- 비건 대표, 1월 31일 스탠포드 대 특강에서 동시적, 병행적 조치 발언으로 기대감 고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에서 '영변 방안' 거부.
- 김정은 위원장,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측 중재자 역할 진실성과 미국 설득 역량에 불만 표명.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에 불만을 표명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자, 불만 가중.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발언 계기로 통미배남 가시화.
-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에서 '영변 방안' 협의를 공개하지 않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공식 합의문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판단. 당시에는 한국 정부의 중재자 역할과 위상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포함했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의 면이 유를 제공. '영변 방안'이 하노이에서 처음 나왔다면 미국에서 수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당시 미국이 거부했던 원인 가운데 하나인 전문가 집단의 '영변' 가치 폄하 현상을 우회했을 것으로 사료.

## 2) 판문점 깜짝 회동 지원과 촉진자 역할 재발견

- 문재인 대통령은 6월 30일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깜짝 회동 지원. 당시 회동은 북한과 미국 모두 실무 지원 요소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정.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악수하는 장면에서 문



재인 대통령은 건물 안에서 기다렸고, 세 정상은 만났다가 북미 정상만 회담장으로 들어가고 문재인 대통령은 뒤에 남는 상황이 공개되면서 수모를 당했다는 비판 제기.

- 중재자로서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지적이지만 한국은 북한과 미국 관계에서 중재자가 되기에는 어려운 조건. 한국은 미국과 동맹이고, 북한과는 동족이라는 점에서 양측 모두 한국을 과도하게 의심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중재자 역할 수행 불가능.
- 그런데도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면서 기대감을 과도하게 높였기 때문임.
- 한편 촉진자는 동맹이나 동족 관계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역할로 공식적, 공개적 활동은 물론 비공식적, 비공개적 활동을 한다고 해도 모순이 없고, 중재자처럼 존재감을 과시해야 하는 강박 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음. 당사자 차원에서도 촉진자는 모순이 없음.
- 한국 정부는 판문점 회동을 통해 촉진자 가능성을 재발견한 것으로 평가됨.

### 3) 스톡홀름 실무 협상과 보이지 않는 촉진자 역할 연습

- 스톡홀름 북미 실무 협상에서 한국은 북한과 소통하지 못해서 중재자 역할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 직면. 다만 미국이나 스웨덴과 소통하면서 촉진자 역할은 일정 부분 진행.
-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려는 조건에서 앞으로도 한국의 촉진자 역할은 스톡홀름에서 경험한 방식과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 북한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설득과 권고 노력도 포기할 필요가 없지만, 북미 관계 개선 지원 활동을 간접적이고 다양하게 전개

할 필요 있음.

- 다만 한국이 중재자든, 촉진자든 북미 협상에서 존재감이 부각하는 것은 북한과 미국을 자극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는 구상 폐기 필요.

## ▣ 2019년 북미 관계 총평과 주요 특징

1. 2019년 북미 관계는 1월과 2월 하노이 회담 개최 이전의 기대감을 고려하면 매우 실망스럽게 진행. 그러나 70년 동안 지속한 적대 관계 역사를 고려하면 2019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향한 긍정적인 변화 시기로 평가. 다만, 기대와 실망이 자주 교차했던 상황을 고려해서 ‘평화 외교 조정기’로 규정.
2. 톱다운 외교 지속. 북미 대화나 협상 추동력이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의지라는 점은 2018년과 마찬가지로 2019년에도 유효. 특히 판문점 깜짝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 특성이 주요 성사 배경.
3. 톱다운 방식 지속으로 북미 관계는 북한과 미국의 국내 정치 일정과 연동. 하노이 회담의 경우 미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 일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김정은 위원장이 12월을 협상 시한으로 설정한 것은 북한 국내 정치 일정을 고려한 결과.
4. 북미 관계에 관여하는 한국의 역할 축소, 또는 변형. 하노이 회담 이전에는 북한, 미국과 별도 접촉하면서 중재자 역할 수행.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남한을 배제하면서 한국은 미국과만 정상 소통. 북한은 미국과 협상하면서 독자적인 외교 전략을 구사하거나 중국 조언을 중시하는 것으로 추정.
5. 북한 외무성이 대미 협상 주도. 하노이 회담 이전에는 통일전선

부가 협상 주도. 외무성이 협상 주도하면서 벼랑끝 전술, 여론 전 다양화 등 재연. 협상 전략도 대북 제재 해제를 직접 요구하는 방식에서 국가 안전 보장과 대북 제재 해제를 동시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경.

## ▣ 2020년 북미 관계 전망과 변수

1. 북미 관계 역사 차원에서 보면 2019년은 평화 외교 조정기. 따라서 북한과 미국, 또는 한국에서 정책 조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하면 2020년에 긍정적인 상황조성 가능. 그러나 조정이 긍정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새해 북미 관계는 부정적으로 전개.
2. 북한과 미국 모두 2020년에 민감한 국내 정치 일정 예정. 북한은 5개년 경제 발전 전략 마지막 해로 가시적 경제 발전 성과 제시 필요. 미국 11월 대통령 선거. 북미 관계는 북한의 5개년 전략 마무리 전략과 미국의 대선 전략과 연동.
3. 북미 제3차 정상회담이 합의된다면, 그 시기는 2월에서 4월 초 이전 가능성. 미국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2월에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처지에서 대형 이벤트 수요 발생. 김정은 위원장도 4월 태양절 이전이 경제 발전 성과 제시라는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 예상.
4.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원하는 합의가 이뤄지면 개방을 포함한 대규모 경제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자주 표출. 그러나 원하는 수준의 합의를 확보할 수 없다면, 자력갱생 방식으로 중규모, 또는 소규모 경제 발전을 추진한다는 구상 시사. 김 위원장 선호는 70 대 30 정도로 분석.
5. 김정은 위원장 정세 판단과 향후 정책 방향은 2020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공개. 따라서 북한은 연말 이전에 미국과의 협상 전

망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2020년 정책 기조를 정한 뒤 신년사에 반영 예상. 이번 신년사에 관한 관심도 1년 전 못지않게 클 것으로 예상.

6. 북한 협상 대표들의 관료주의 행보 역시 2020년 북미 관계 변수. 주로 외교관으로 구성된 북한 협상 대표들은 하노이 회담처럼 결렬로 끝나는 경우 문책을 받을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추정. 김 위원장 위대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최대한으로 올려놓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벼랑끝 전술을 벌이는 것이 개인의 안전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추정. 만약 미국이 불응하면 양보하기보다는 판을 깨고 미국을 비난하면서 개인적으로 문책을 피하는 방법 선호.
7. 미국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 사람. 비건 대표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지만,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는 차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절박하게 북미 협상 타결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 업적 과시나 노벨상 차원에서 관심을 보이는 상황. 북미 협상에 대한 미국의 정책 수요도 역시 존재하지만, 비교적 소규모로 평가.
8. 트럼프 대통령 최대 관심사는 국내 정치 상황에서 자신의 존재감 확인.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말 및 연초 변수는 두 가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상황과 우크라이나 로비 의혹 관련 미 의회 탄핵 움직임. 당장은 내년 2월까지 탄핵과 관련한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 예상.
9. 살펴본 대로 북미 협상에 대해 북한과 미국의 정책 수요는 존재하지만, 절대적으로 보면 크지 않은 편으로 평가. 북한과 미국만 참여한다면 북미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 우세. 반면에 한국은 국가 생존과 발전이 북미 관계 개선과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북미 협상에 대한 정책 수요가 가장 많고, 그러기 때문에 최대 변수는 한국. 한국이 조정기를 거치면서 올 한해 평화 외교에서 오류가 발생한 부분을 지목하고 원인을 파악해서 효과적인 전략 대안을 찾아낸다면 북미 관계 흐름에서 순항 가능성 증가. 그러나 조정기를 거치면서도 반성과 혁신을 하지 못한다면 북미 관계 개선이나 비핵화 흐름은 역풍을 맞거나 제자리 걸음 불가피.



## 2

# 남북관계: 2019년 평가와 2020년 전망

이 제 훈

(〈한겨레〉 통일외교팀 선임기자)

□ 2019년 총평: 마른하늘에 천둥번개, 그리고 짙은 먹구름

-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무산이 2019년 한반도 정세의 결정자
  
- 하노이 회담의 세 가지 부정적 영향
  - ① 북-미 불신, 특히 북한의 대미 불신 증폭
  - ② 한국의 중재·촉진 역할의 한계 노정(2018년 9·19 평양 공동 선언 ‘영변 카드’의 실패, 영변-제재 완화 맞교환 카드 실패)
  - ③ 미국의 남북관계 개선 가로막기 강화(한-미 워킹그룹, 유엔사)
  
- 문재인 대통령, 북-미 협상 최종 결렬 아닌 상황에서 미국과 보조 맞추느라 남북관계 개선 속도 내지 못하고 엉겨주춤

- 김정은 국무위원장, 문 대통령의 축진·중재 역량 회의, 불만 참지 못하고 한국 압박 행동 시작(금강산관광시설 철거 지시 등)
- 2019년 남북관계 풍경[**☞당국회담(공식, 공개) 0회**]
  1. 희망으로 시작해, 갈등으로 마무리(☞ 대표적 가늠자 ‘금강산 관광사업’)
  2. 군사 충돌 없음. 9·19 군사 합의 유효
  3. ‘미국 변수’의 압도적 중요성(☞ 북은 ‘선미후남’ 경향, 남은 제재 의식 한미 공조.....남북관계 개선 어려움)
- 남북의 상호 신뢰 지수 하락, 활로 찾지 못하는 남북 관계
  - ※ 김정은 위원장 호감도 2018년 5월 31%까지 올랐다 2019년 11월 9%로 떨어져 남북정상회담 이전으로, 꺾림 2019년 11월22일 발표///북에서도 지난해 9월 평양 정상회담 이후 치솟은 남북관계 개선 기대감이 올 들어 빠르게 가라앉고 있다고

## □ 일지로 되짚어보는 2019년 남북관계

### 1. (1월1일) 김정은 신년사

※ 경제(28회//2018년에는 21회), 자립경제(7회) 통일(7회), 자력갱생(3회)

※ 구호 =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북한 내부) **군수공업부문**에서는 조선반도의 평화를 무력으로 믿음직하게 담보할수 있게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를 다그쳐 나라의 방위력을 세계선진국가수준으로 계속 향상시키



면서 경제건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대남)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한해동안 세차례의 북남 수뇌상봉과 회담이 진행된것은 전례없는 일이며 이것은 북남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조선반도에 더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를 열어놓으려는 확고한 결심과 의지를 담아 채택된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북남군사분야합의서는 북남사이에 무력에 의한 동족상쟁을 종식시킬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선언으로서 참으로 중대한 의의를 가집니다. 북과 남의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대회에서 공동으로 진출하여 민족의 슬기와 힘을 떨칠 때 예술인들은 평양과 서울을 오가며 민족적화해와 통일열기를 뜨겁게 고조시켰습니다. 여러가지 장애와 난관을 과감하게 극복하면서 철도, 도로, 산림, 보건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업들을 추진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을 내디디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북남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나간다면 조선반도를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로 만들수 있다는 확신을 온 겨레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아직은 첫걸음에 불과하지만 북과 남이 뜻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불신과 대결의 최극단에 놓여있던 북남관계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돌려세우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경이적인 성과들이 짧은 기간에 이룩된데 대하여 나는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북남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며 온 겨레가 북남관계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당면하여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

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북과 남이 굳게 손잡고 겨레의 단합된 힘에 의거한다면 외부의 온갖 제재와 압박도, 그 어떤 도전과 시련도 민족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을수 없을것입니다.

북과 남이 평화번영의 길로 나가기로 확약한 이상 조선반도정세 긴장의 근원으로 되고있는 ①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②외부로부터의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는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대미) 나는 앞으로든 언제든 또다시 미국대통령과 마주앉을 준비가 되어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것입니다. 다만 미국이 세계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만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수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게 될수도 있습니다.

## 2. (1월7~10일) 김정은 4차 방중(베이징, 전용열차)

(중국 발표) 중요한 합의를 이뤘다. 쌍방은 ① 중조관계가 새로운 시기에 끊임없이 새로운 발전을 거두고, ②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를 계속 추진하고, ④ 양국 인민에 더 많은 복을 주고, ④ 지역과 세계 평화,안정,번영을 위해 적극적인 공헌을 하

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는데 일치

(북한 발표)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는....특히 조선반도정세관리와 비핵화협상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종해 나가는 문제와 관련하여 심도있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진행하였으며 대외관계분야에서 두 나라 당과 정부가 견지하고있는 자주 적립장들에 대하여 호상 이해와 지지, 현대성을 표명하시였다.

※ 1월23일(수) 북 친선예술단 방중(단장 리수용//현송월도)+1월 27일(일) 시진핑 부부 공연 관람(국가대극원)

3. (1월17~19일, 미국 시각)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겸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2차 방미(워싱턴 직행)

: 트럼프 예방(18일 낮 12시15분부터 90분 백악관 집무실, 김정은 친서 전달)/백악관 대변인 '2월 말 2차 북미 정상회담' 발표  
+ 최선희-비건 스톡홀름 실무협의를(1월19~21일)  
+ 김혁철-비건 실무회담(2월6~8일 평양)

4. (2월27~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하노이)

※ 리용호 외무상 하노이 심야 기자회견 전문(3월1일 0시 조금 지나 멜리아 호텔)

이번 2차 조미수뇌상봉 회담 결과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미 양국의 수뇌분들은 이번엔 훌륭한 인내력과 자제력을 가지고 이틀간에 걸쳐서 진지한 회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6월 싱가포르 회의 중 1차 조미수뇌상봉회담 공동인식으로 이룩된 신뢰조성과 단계적 해결 원칙에 따라 이번 회

담에서 현실적 제안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제재의 일부, 즉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우리는 ① 영변 핵의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시설을 ②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하에 ③ 두 나라 기술자들의 공동의 작업으로 ④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 아니고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미 양국 사이의 현 신뢰 수준을 놓고 볼 때 현 단계에 우리가 내 짚을 수 있는 가장 큰 보폭의 비핵화 조치입니다. 우리가 비핵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아직은 군사 분야 조치 취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 보고 부분적 제재해제를 상응 조치로 제안한 것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는 미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를 영구적으로 중지한다는 확약도 문서 형태로 줄 용의를 밝혔습니다. 신뢰조성 단계를 거치면 앞으로 비핵화 과정은 더 빨리 전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영변 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제안한 거 보다 더 좋은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건지 이 자리에서 말하기 힘듭니다. 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 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여로의 여정에는 반드시 이러한 첫 단계공정이 불가피하며 우리가 내놓은 최대한의 방안이 실현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원칙적 입장에는 추후도 변함이 없을 것이며 앞으로

미국 측이 협상을 다시 제기해오는 경우에도 우리 방안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5. (3월4일) 문재인 대통령 NSC 주재(2018년 6월14일 주재 이후 처음)

“... 각 부처가 세 가지 방향에서 노력 해주셨으면 한다. 첫째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입장 차이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입장 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 모색해주길 바란다. 북미 회담 중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의 교착이 오래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음으로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 둘째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최대한 찾아주길 바란다. 특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주길 바란다. 셋째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가능한 단기적,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주시길 바란다.”

+ (3월17일) 청와대 고위관계자 백브리핑 = ① good enough deal ② 한두번의 연속적인 early harvest ③ 비핵화에 대한 운용적인 정의... operational definition

6. (3월22일) 북,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쪽 인력 일방 철수

※ 3월22일(금) ‘상부의 지시’를 이유로 일방 철수+남측 사무소 잔류는 상관하지 않겠다 통보

3월25일(월) ‘평소대로 교대 근무차 내려왔다’ 4~5명 업무 복귀

3월29일(금) 북 근무 인원 9~10명으로 평소 수준 회복

4월1일(월) 김광성 소장대리 업무 복귀

**7. (4월8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취임**

※ 3월8일 후보자 지명, 3월26일 인사청문회

**8. (4월12일) 김정은 국무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내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우리 공화국앞에 나서고있는 중심과업은 나라의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여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는것입니다.

**(대남)** 남조선당국과 손잡고 북남관계를 지속적이며 공고한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 온 겨레가 한결같이 소원하는대로 평화롭고 공동번영하는 새로운 민족사를 써나가려는것은 나의 확고부동한 결심이라는것을 다시한번 분명히 해둡니다. 외세의존정책에 종지부를 찍고 모든것을 북남관계개선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나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을 바란다면 판문점상봉과 9월 평양상봉때의 초심으로 되돌아와 북남선언의 성실한 리행으로 민족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조선당국은 추세를 보아가며 좌고우면하고 분주다사한 행각을 재촉하며 오지랖넓은 《중재자》,《촉진자》행세를 할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리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여야 합니다....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북남관계개선과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갈 의향이라면 우리의 립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적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앞으로도

민족의 지향과 념원을 승엄히 새기고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진지하고 인내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나갈것입니다.**

(대미) 조미사이에 뿌리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있는 조건에서 6.12조미공동성명을 리행해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리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미국이 제3차 조미수뇌회담개최에 대해 많이 말하고있는데 우리는 하노이조미수뇌회담과 같은 수뇌회담이 재현되는데 대하여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대통령이 계속 언급하는바와 같이 나와 트럼프대통령사이의 개인 적관계는 두 나라사이의 관계처럼 적대적이지 않으며 우리는 여전히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있으며 생각나면 아무때든 서로 안부를 묻는 편지도 주고받을수 있습니다. 미국이 옳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보면 그 무슨 제재해제문제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올해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것입니다.

★미국은 남조선당국에 《속도조절》을 로골적으로 강박하고있으며 북남합의리행을 저들의 대조선제재압박정책에 복종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있습니다.

8. (4월27일) ‘DMZ 평화의 길’ 고성 구간 일반 개방

+ 철원 구간(6월1일), 파주 구간(8월9일) 개방

9. (5월7일) 문재인-트럼프 전화 통화

※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발표문) 양 정상은 최근 WFP/FAO가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하였다.

※ (5월9일, 문재인 대통령,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 “동포애나 인도주의적인 차원, 대화 교착상태를 조금 열어주는) (5월17일) 정부(NSC 상임위),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방북 무산) & 800만 달러 WFP 유니세프 공여 추진(6월11일 입금 완료) 발표

10. (5월9일) 김정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 현지도

※ (5월4일) 김정은, 동해상 동부전선부대 화력타격훈련 지도

11. (6월12일) 김정은 위원장,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별세 조의문+조화 전달(판문점)

※ 김여정(+리현 통전부 실장)-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호 통일부 차관, 박지원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윤건영 국정상황실장)//〈노동신문〉 6월13일치 1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리희호녀사의 유가족들에게 조의문과 조화를 보내시었다”



12. (6월12일) 문재인 대통령 오슬로 포럼 연설 “국민을 위한 평화”

※ “... 마침 오늘은 ‘제1차 북미 정상회담’ 1주년은 맞는 날입니다. ... **“평화란 힘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평화는 오직 이해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아인슈타인의 통찰이 우리 모두에게 새겨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 온 노르웨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혜를 배웁니다.

- ① 첫째, 일상을 바꾸는 적극적 평화입니다.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입니다.** 함께한 역사는 5천 년이고, 헤어진 역사는 70년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오가지 못하는 접경지역에서도 산불은 일어나고, 병충해와 가축전염병이 발생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다 위의 경계는 어민들의 조업권을 위협합니다. 갈통 교수가 지적한 대로, 남북한 주민들이 분단으로 인해 겪는 구조적 폭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국민을 위한 평화(Peace for people)’**로 부르고 싶습니다. ★**접경지역의 피해부터 우선 해결돼야 합니다.**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에 따라 설치된 ‘접경위원회’는 협력의 좋은 사례★입니다. 동독과 서독은 접경지역에서 화재, 홍수, 산사태나 전염병, 병충해, 수자원 오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접경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공동 대처했습니다. 이러한 선례가 한반도에도 적용되어, 국민들 사이에서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이 자라길 바랍니다.

- ② 둘째, **이웃국가의 분쟁과 갈등 해결에 기여하는 평화**입니다. 오늘날 전세계에서 냉전이 종식되었지만, **한반도에는 여전히 ★냉전구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남북은 분단되어 있고, 북

한은 미국, 일본과 수교를 맺지 않았습니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은 동북아에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구도의 완전한 해체를 의미합니다. ... 나는 지난해 8월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 13. (6월14일) 문재인 대통령, 스웨덴 의회 연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신뢰”

※ “...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남과 북 간에 세 가지 신뢰를 제안 합니다.

① 첫째, 남과 북 국민 간의 신뢰입니다.

② 둘째, 대화에 대한 신뢰입니다.

평화는 평화로운 방법으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화입니다. 북한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도 핵무기가 아닌 대화입니다. 이는 한국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간의 평화를 궁극적으로 지켜주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서로의 체제는 존중되어야 하고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평화를 위한 첫 번째이며 변할 수 없는 전제입니다. 북한이 대화의 길을 걸어간다면,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북한의 체제와 안전을 위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신뢰하고, 대화 상대방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화의 전제입니다. 한국 국민들도 북한과의 대화를 신뢰해야 합니다. 대화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평화를 더디게 만듭니다. 대화만이 평화에 이르는 길임을 남북한 모두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③ 셋째, 국제사회의 신뢰입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이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

다. 북한은 완전한 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질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양자대화와 다자대화를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와 대화를 계속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이 합의한 교류협력 사업의 이행을 통해 안으로부터의 평화를 만들어 증명해야 합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북한과 함께 변함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남북 간의 합의를 통해 한국이 한 약속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14. (6월19일) 김연철 통일부 장관, WFP 통해 국내산 쌀 5만톤 지원 방침 발표**

※ 협력기금 270억+양특회계 1천억, 포대에 대한민국 표기, 모니터링은 세계식량계획. // 북 접수 거부

**15. (6월20~21일)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평양 방문,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

※ 시진핑 〈노동신문〉 기고문(6월19일치 1면)“ 중조친선을 계승하여 시대의 새로운 장을 계속 아로새기자”

“…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친선협조관계를 공고발전시킬데 대한 중국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며 변할수도 없습니다. 중국측은 김정은위원장동지께서 조선당과 인민을 이끌어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개선에 총력을 집중하여 조선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롭고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시는것을 견결히 지지할것입니다. … 우리는 김정은위원장동지의 옳바른 결단과 해당 각

측의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에 평화와 대화의 대세가 형성되고 조선반도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쉽지 않은 역사적기회가 마련됨으로써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정과 기대를 획득한데 대하여 기쁘게 보고있습니다. **중국측은 조선 동지들과 함께 손잡고 노력하여 지역의 항구적인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함께 작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나와 김정은위원장동지의 지도와 공동의 노력에 의하여 70년의 빛나는 로정을 걸어온 중조관계는 새로운 역사적출발점에 섰으며 새로운 생기와 활력을 내뿜고있습니다.

이로부터 나는 이번 방문을 통하여 김정은위원장동지와 조선 동지들과 함께 중조친선협조관계를 설계하고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려고 합니다.

-**전략적의사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서로 배우면서 전통적인 중조친선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할것입니다.** 고위급래왕의 훌륭한 전통과 인도적역할을 발휘하여 중조관계발전의 설계도를 잘 작성하고 중조관계발전의 방향을 잘 틀어줄것입니다.

-**친선적인 래왕과 실무적인 협조를 강화하여 중조관계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것입니다.**

-**의사소통과 대화, 조들과 협조를 강화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나갈것입니다.** ...중국측은 조선측이 조선반도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는것을 지지하며 대화를 통하여 조선측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것을 지지합니다.

16. (6월30일, 일) 김정은, 트럼프 판문점 만남(53분 대화, 트럼프 MDL 월경)+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판문점 만남

※ 한반도 정세

- ① G20(오사카, 6월28~29일) 계기 트럼프 방한(29~30일)
- ②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북 정상회담(평양, 6월20~21일)
- ③ 김정은-트럼프 친서 교환(트럼프 6월11일과 17일 김정은 친서 받은 사실 공개, <노동신문> 6월23일치 1면 김정은이 트럼프 친서 받았다고 공개)
- ④ (트럼프 트윗 전달인) 6월28일 미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회 이틀째(국내 정치 요인) & 트럼프 시진핑과 정상회담(29일 오전) 앞두고 비공식 협의(외교 요인)

※ 판문점 만남 성격 규정

**북한** = “회담”(〈노동신문〉 7월1일치 기사 “조미최고수뇌분들의 단독회담과 회담”)

“적대와 대결의 산물인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서 북남조선과 미국의 최고수뇌들이 분단의 선을 자유롭게 넘나들고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은 전세계를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게 하였으며 ★오랜 세월 불신과 오해, 갈등과 반목의 역사를 간직한 판문점에서 화해와 평화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보여 주었다.”(〈노동신문〉 7월1일치)

**한국** = “회담”(7월4일 NSC 상임위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회동”)

“미국의 정상이 특별한 경호 조치없이 북한 정상의 안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곳에

서 남북미 정상회담도 이뤄졌습니다. 이로서 ★남북에 이어 북미 간에도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문재인 대통령, 7월2일 국무회의)

미국 = “회담도 협상도 아니었다. 두 정상의 만남이었다”(I know that the team remains very encouraged by the historic visit of President Trump. ★It wasn't a summit, it wasn't a negotiation; it was a meeting of two leaders.★ But of course, that was a very, I think, special and historic day for many people around the world....MORGAN ORTAGUS 미 국무부 대변인, 7월9일 정례브리핑)

“we had a pretty long chat”(트럼프, 6월30일 회견), meeting

I think it's historic. A great day for the world beyond south korea north korea and it's an honor for me to be here(트럼프, 6월30일 군사분계선 넘어갔다 오자마자)

17. (7월4일, 목) 일본 정부, 반도체 & 디스플레이 3대 주요 소재 수출 규제 조치 실행(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 (8월2일) 아베 내각,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

18. (7월25일) 김정은,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 지도(북, 원산 북쪽 호도반도 일대에서 동해 북동쪽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 2발 발사)

(노동신문 7월26일치 1면 보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신형전술유도무기 위력시위사격을 조직지도하시였다”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우리의 거둬들이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지역에 ①침단공격형무기들을 반입하고 ②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열을 올리고있는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무력시위의 일환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사격을 조직하시고 직접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세상사람들앞에서는 《평화의 악수》를 연출하며 공동선언이나 합의서같은 문건을 만지작거리고 뒤돌아앉아서는 최신공격형무기반입과 합동군사연습강행과 같은 이상한짓을 하는 이중적행태를 보이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남조선당국자가 사태발전전망의 위험성을 제때에 깨닫고 최신무기반입이나 군사연습과 같은 자멸적행위를 중단하고 하루빨리 지난해 4월과 9월과 같은 바른자세를 되찾기 바란다는 권언을 남쪽을 향해 오늘의 위력시위사격소식과 함께 알린다고 말씀하시였다. 아무리 비위가 거슬려도 남조선당국자는 오늘의 평양발 경고를 무시해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할것이다

19. (8월1~2일) ARF 외교장관회의(타이 방콕)

※ 북, 주타이 북한대사(김제봉)가 대표로 ARF 참석(외무상 불참은 2009년 불참 이후 처음/북한은 ARF에 가입한 2000

년 이후 2001년, 2003년,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외무상 참석)

20. (8월2일) 미국,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공식 탈퇴

21. (8월22일) 정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22. (9월9일) 북, 북미 실무협상 일정 제안(최설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 “나는 미국에서 대조선협상을 주도하는 고위관계자들이 최근 조미실무협상개최에 준비되어있다고 거듭 공언한데 대하여 류의 하였다.···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

+ 9월6일(금, 미국 현지시각) 스티브 비건 대북특별대표, 미시건대 공개 강연(주한미군, 한일 핵무장 언급)

23. (9월22~26일) 문재인 대통령, 24일 유엔 총회(74차) 기조연설(뉴욕) + 한미 정상회담

※ 9월24일(화, 뉴욕 9월23일 오후) 문재인-트럼프 한미 정상회담(뉴욕)

(청와대 대변인 발표문) “··· 두 정상은 ①최근 북한의 대화 재개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②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③ 북미 실무 협상에서 조기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③-  
①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할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 9월25일(수, 뉴욕 9월24일)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중략)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한 나의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 ① 그 원칙은 첫째, 전쟁불용의 원칙입니다.
- ② 둘째, 상호 간 안전보장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입니다. 북한도 한국의 안전을 보장하길 바랍니다.
- ③ 셋째, 공동번영의 원칙입니다. 평화는 단지 분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포용성을 강화하고 의존도를 높이고 공동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나는 오늘 유엔의 가치와 전적으로 부합하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유엔과 모든 회원국들에게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 비무장지대는 세계가 그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입니다. 나는 ①남·북 간에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것입니다.

②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하여 남과 북, 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내고, ③ 비무장지대 안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 생태, 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 평화유지(PKO), 군비통제, 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되어 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엔지뢰행

동조식'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 한반도의 허리인 비무장지대가 평화지대로 바뀐다면,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며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국가로 발전할 것입니다."

#### 24. (10월2일) 북,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 시험발사

※ <노동신문> 1~2면 화보 펼침/김정은 현지 지도 참관하지 않음. “새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시험발사의 성공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①외부세력의 위협을 억제하고 ②나라의 자위적군사력을 더한층 강화하는데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중대한 성과로 된다”

※ 발사일/발사장소/예상발사체/발수/거리/고도(KM)/북한발표

① 5월4일=원산 호도반도/KN-23(이스칸데르급)/2/240/60// 전술유도무기(화력타격훈련)

② 5월9일=평북 구성/KN-23(이스칸데르급)/2/420/50//장거리타격수단(화력타격훈련)

③ 7월25일 = 원산 호도반도/KN-23(이스칸데르급)/2/600/50//신형전술유도무기(위력시위사격)

④ 7월31일 = 원산 갈마반도/신형 방사포(400mm)/2/250/30//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시험사격)

- ⑤ 8월2일 = 함경남도 영흥/신형 방사포(400mm)/2/220/35/  
/신형대구경조종방사포(시험사격)
- ⑥ 8월6일 = 황해남도 과일/KN-23(이스칸데르급)/2/450/37  
//신형전술유도탄(위력시위발사)
- ⑦ 8월10일 = 함경남도 함흥/신형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2/  
400/48//새 무기
- ⑧ 8월16일 = 강원도 통천/신형 전술 지대지 탄도미사일/2/230  
/30//새 무기(8월20일 한미 연합 지휘소 연습 종료)
- ⑨ 8월24일 = 함경남도 선덕/단거리탄도미사일(추정)/2/380/  
97//초대형 방사포(시험사격)
- ⑩ 9월10일 = 평안남도 개천/초대형 방사포/2 또는 3(북은 2  
발 발표, 실제론 3발중 1발 불발)/330/50~60/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 ⑪ 10월2일 = 원산만 수역(원산 북동쪽 해상 17km 수역)/잠수  
함 탄도탄 '북극성-3형'/1발, 최대고도 910, 사거리 450/북,  
북극성-3형 시험발사, 성공이라 보도(김정은 현지지도 없음)
- ⑫ 10월31일 = 평남 순천 일대//2발, 최대 비행거리 370km,  
고도 90km/초대형 방사포 연속발사 시험사격. “성과적 진행”  
(초대형 방사포 시험발사는 8월24일, 9월10일에 이어 세 번째)  
/국방과학원/ 김정은 현지지도 없음

**25. (10월4~5일) 북-미 실무협상(스웨덴 스톡홀름)**

※ 10월1일 최설희 일정 합의 담화 발표(4일 예비접촉, 5일  
실무협상)/5일 김명길-스티븐 비건 실무협상, 4일 권정근-램  
버트 예비접촉(도합 8시간 30분)  
김명길 수석대표 성명+회견(10월5일) “미국이 우리가 요구한

계산법을 하나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

26. (10월15일)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평양 남북 경기(무관중+무중계+무응원+무기자 경기)

27. (10월22일) 문재인 대통령,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 “... 셋째,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입니다.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입니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결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강한 안보입니다.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국방비를 내년 예산에 50조 원 이상으로 책정했습니다.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 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 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28. (10월23일) 김정은, 금강산관광지구 현지도 “남측 관계부문과 합의하여 시설 철거” 지시(노동신문 1면 보도)

※ 장금철 통전부장,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동행

+ (10월25일) 북 금강산국제관광국, 통일부 + 현대그룹에 철거 협의 통지문

※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보도자료) = “북측은 통지문에서 ‘①금강산지구의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며, ②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③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 가기 바란다. 그리고 ④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①첫째,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②둘째, 금강산 관광사업의 의미를 고려하면서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며, ③셋째,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④금강산 관광의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건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1)국제정세 그리고 2)남북협의 등 제반조건과 환경, 그리고 우리 3)국내적 공감대 형성을 들 수 있겠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가면서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 (10월28일) 정부(통일부), 북에 ‘금강산 실무회담’ 제안

+ (10월29일) 북, 금강산 실무회담 거부 통지문

29. (10월30일) 김정은, 문재인 대통령 모친(강한옥)상에 ‘조의문’

※ 30일 오후 판문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가서 받아왔다. 북에서 누가 나왔는지는 밝히지 않음(김여정은 아니라고)

30. (11월7일) 동료선원 16명 살해한 20대 북 어부 2명 추방(선박은 8일 북에 인계, 어부 2명 추방 의사 대북 통보는 5일)
31. (11월17일)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 연기 공식 발표(정경두-마크 에스퍼, 타이 방콕, 6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계기로 만나서)
32. (11월19일)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남북관계만 생각하면 훨씬 속도를 낼 수 있어. 뛰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보조 맞춰야하고 특히 북미 비핵화 협상 진행 중이라서 이 협상 성공 위해서 동맹인 미국과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하는 문제도 있어"
33. (11월21일) 북, 부산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김정은 위원장 초청 불참 통보(중통)  
 ※ (<조선중앙통신>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가 있는 법이다"  
 "... 지난 11월 5일 남조선의 문재인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이번 특별수뇌자회의에 참석 해주실것을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정중히 보내여왔다. 우리는 보내온 친서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진정으로 되는 신뢰심과 곡진한 기대가 담긴 초청이라면 굳이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까닭이 없다. ... 이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현 북남관계를 풀기 위한 새로운 계기점과 여건을 만들어보려고 하는 문재인대통령의 고뇌와 변민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그것은

문재인대통령의 친서가 온 후에도 몇차례나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못오신다면 특사라도 방문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청을 보내온것만 보아도 잘 알수있다.··· 하지만 ① 흐려질대로 흐려진 남조선의 공기는 북남관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며 ② 남조선당국도 북남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의연히 민족공조가 아닌 외세의존으로 풀어나가려는 그릇된 립장에서 탈피하지 못하고있는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 과연 지금의 시점이 북남수뇌분들이 만날 때이겠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수 없다...판문점과 평양,백두산에서 한 약속이 하나도 실현된것이 없는 지금의 시점에 형식뿐인 북남수뇌상봉은 차라리 하지 않는것보다 못하다는것이 우리의 립장이다.··· 남측의 기대와 성의는 고맙지만 국무위원회 위원장께서 부산에 나가셔야 할 합당한 이유를 끝끝내 찾아내지 못한데 대해 리해해 주길 바란다”

#### 34. (11월22일) 정부,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유예’ 결정 발표

##### □ 2020년 전망 = 일단 흐림

- 경로 1(상대적으로 가능성 낮음) = 3차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따른 극적 반전, 남북관계 개선 가속도
- 경로 2(상대적으로 가능성 높음) =북-미 협상 지지부진 또는 중단, 김정은 위원장 ‘새로운 길’ 모색 ... ..그러나 핵실험 재개 +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하지 않을 가능성(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이 상황은 남북관계에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음.

- ① 합리적 예측 범위에서 남북관계 추가 악화 가능성 있음. 남북미 3각 관계론을 토대로 전망하자면, 북-미 관계 삐걱거리는데 남북관계만 속도를 내기는 어려움.
- ②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정세 악화에도 위기관리 차원에서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 시도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음.
- ③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 김정은 위원장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경로 3(상대적으로 가능성 매우 낮음) = 한반도에 2017년과 같은 전쟁 위기 상황 재연.

- ① 11월 재선 위한 대선 치러야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반도 정세 치명적 악화 피하려 할 것
- ② 김정은 위원장, 2018년 4월 채택한 ‘경제 집중’ 전략노선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임. 포기는 리더십 기반 훼손으로 이어질 위험 농후.

## □ 2020년 정세 영향 주요 변수

위 세 가지 경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정은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임.

○ (4월15일) 한국 총선

: 총선 결과는 남북관계 향배에 지대한 영향 불가피.



○ (11월3일) 미국 대선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 여부는 물론, 선거 과정에서 '트럼프 재선 전망'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지대한 영향 불가피.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미, 대남 전략에 핵심 변수의 하나임.

※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 스포츠 일정

- ① (6월4일)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남-북전(북한 방남)
- ② (7월4~8월9일) 도쿄 여름올림픽



## 북한 내부 정세: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장 용 훈

(연합뉴스 한반도부장)

### 1. 2019년 북한...보수 기조 속 인적 변화

북한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4년차를 맞아 대외적으로 미국과 관계개선을 이루고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 경제발전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초 비교적 적극적인 국가운영 청사진을 제시

그러나 목표로 했던 북미관계 개선이 하노이 노딜로 암초에 부딪친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추지하던 정책들도 매우 보수적으로 조정하는 모습.

여기에다 하노이 노딜에 따른 책임 묻기 인사가 이어졌고 2018년말 시작된 ‘부패와의 전쟁’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기강확립에 집중.

특히 북한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의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하고 국무위원장의 권한과 권능을 강화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공고화에 주력함으로써 외부적 시련을 권력 안정화에 적극 활용.

## ① 대미협상 결렬로 내부 분위기 위축

### ▲ 긍정적인 대내외 메시지를 담은 신년사

-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
- “북남 사이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온 겨레가 북남관계 개선의 덕을 실지로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며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언급
- “올해의 우리 앞에는 나라의 자립적 발전능력을 확대 강화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진일보를 위한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아야 할 투쟁과업이 나르고 있다”며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관료주의·부정부패 척결을 강력하게 주문.

### ▲ 극도로 위축된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 “제재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수뇌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
-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며 “말로서가 아니

라 실천적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주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

- “미국과의 대치는 어차피 장기성을 띠게 되어있다. 장기간의 핵 위협을 핵으로 종식한 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 돌풍은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그 어떤 도전과 난관이 앞을 막아서든 우리 국가와 인민의 근본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티끌만 한 양보나 타협도 하지 않을 것”

## ② 협력 대신 자력갱생의 강조

### ▲ 노동당 제7기 4차 전원회의

- 김정은 위원장은 “당 및 국가적으로 시급히 해결 대책하여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심각히 분석했다”며 “긴장된 정세에 대처하여 간부들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고도의 책임성과 창발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라” 지시

### ▲ 제재로 인한 시련의 부각

- ‘우리의 전진은 즐기차고 역세다’ 제목의 정론(3.21)은 “나무는 바로 서서 높이 자라려 하지만 폭풍과 강설이 그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며 “숨은 위기와 낭떠러지도 피해가야 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시종일관 곧바로 전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강조
- 제재로 옥죄인 상황을 ‘유례없는 시련’이라며 “전후 젓터미도 헤치고 고난의 행군도 해보았지만, 현세기의 10년대에 우리가 겪은 난관은 사실상 공화국의 역사에서 가장 엄혹한 시련”이라고 부각

- ▲ 자력갱생을 변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마  
다에서 일대 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강원도 결의대회
  -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은 “우리는 적대세력들이  
제재를 해제하든 안 하든 자력갱생으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높은 목표를 향하여 곧바로 전진할 것”이라면서 “전인민적인  
만리마속도 창조투쟁으로 일대 양양을 일으켜나가자”고 촉구
  - 토론에서 “조선사람의 자존심을 걸고 적대세력들의 도전을 자  
력갱생의 무쇠발굽으로 단호히 짓밟개버릴 것” 강조

### ③ 책임자 문책의 단행

- ▲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퇴조
  - 대미·대남 외교를 총괄해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해 과거 대남담당 비서 격인 노동당 부위  
원장 자리는 유지한채 통일전선부장 자리는 장금철에게 인계
- ▲ 김혁철 국무위 대미특별대표 경질
  -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라인으로 분류되던 김혁철 전 특  
별대표는 지난 1월 김 부위원장과 함께 방미, 비건 특별대표와  
상견례를 가진 뒤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협  
상을 진행했으나,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신변 이상설  
이 제기
  - 북한은 지난 6:30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 측에 새  
로운 실무협상 수석대표로 김명길 전 베트남 대사를 통보
- ▲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두문불출
  - 인민문화궁전서 진행된 3.1인민봉기 100돌 기념 평양시보고

- 회 참석 이후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음
- 현재로서는 행적이 묘연한 상황으로 지방에서 교화를 한 이후 복귀 가능성 등은 남아 있음

#### ④ 세대교체의 추진

- 제14기 1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국가 권력기구의 수장들을 모두 바꾸는 등 김정은 2기 정권을 이끌어갈 권력집단의 세대 교체.
- 20년 넘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지켜온 91세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상대적으로 젊은 69세의 최룡해로 교체했고, 80세의 박봉주 총리 대신 60대로 추정되는 김재룡 임명
- 76세의 김계관 전 외무성 제1부상 대신 50대 후반의 최선희가 후임에 임명된 것도 같은 맥락
- 제14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구성원의 경우도 39세 이하가 제13기 3.9%에서 4.8%로 증가

#### ⑤ 이어지는 부패와의 전쟁

- 북한은 2017년 12월 “우리 당은 이미 세도와 관료주의를 우리의 일심단결을 파괴하고 쪼먹는 위험한 독소로, 적들을 도와주는 이적행위로 보고 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밝힘
-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4월 시정연설에서 “국가활동에서 인민을 중시하는 관점과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사회주의 건설과정에 일군들 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와 같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며 ‘부패와의 전쟁’을 이어갈 것을 시사

-미국과 협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부패와 전쟁을 통해 간부들의 경각심을 높이면서 이를 통해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

## 2. 2020년 북한…대미대결 속 보수 기조 유지

북미대화가 속도를 내 북미관계가 전격적으로 화해분위기로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현재 미국의 대북적재시정책 철회를 대화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북미관계 개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2020년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를 맞아 미국의 대북제재를 부각하며 자력갱생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어가는 등 2019년의 보수적 정책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① 제8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조직 정비 가능성

- 2016년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개최한 만큼 규약대로라면 5년 후인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개최할 가능성
- 작년 내각과 최고인민회의의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세대교체를 한 만큼 내년 당 대회와 당 창건 당 장건 75주년을 맞아 개편 가능성
- 이러한 인사를 통해 현재 북한의 내부정책의 난맥상을 최고지도자가 아닌 노동당 간부들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음

### ② 내부자원의 총동원을 통한 5개년 계획 마무리

- 내부적으로는 5개년 계획의 '성공적 완수'를 선전할 것으로 예상



되지만, 실제적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제재를 부각해 미국타격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

- 내년 북한이 '새로운 길'을 선택해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 러시아와 경제교류도 영향을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자력갱생노선의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
- 노동당 창건 75주년으로 이른바 '꺾어지는 해'인만큼 당 창건일 중심으로 각종 경제건설사업 마무리 촉구 가능성
- 국가적으로 외부의 자원과 자본을 끌어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국가를 제외한 기업과 개인의 역할과 기능을 확장할 가능성

### ③ 내부적 기강확립을 위한 조치 가속

- 2018년말 시작된 부패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관료들의 잘못된 행위들에 대한 책벌 지속 전망
- 내부적으로 주민들을 대상으로 황색바람에 대한 경고를 이어가면서 관련 행위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것으로 예상



## II. 토론

북미관계: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장세정(중앙일보 논설위원)

남북관계: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구자룡(동아일보 논설위원)

북한 내부 정세: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안정식(SBS 북한전문기자)

미중관계: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이상만(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한일/북일관계: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조진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미 협상: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남북관계: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구 자 룡  
(동아일보 논설위원)

### ① 김정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김정은 1월 신년사에서 “미국이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고 발언. ‘새로운 길’은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 10월 2일 해주 바지선에서 발사된 북극성 3형 SLBM은 잠수함을 이용해 미 해안에서 발사될 경우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ICBM과 다를 바 없음. 북한과의 파국을 원하지 않는 트럼프나 문재인 정부 모두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 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3월 “핵실험 재개할지 곧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구두 위협, 6월 김정은 취임 3주년에 “핵무력 완성”을 최대 업적이라며 과시. 최선희는 11월 러시아와 첫 ‘전략대화’를 위해 모스크바에 도착해 “비핵화가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졌다”고 공언. 김정은 ‘새로운 길’이 아닌 가던 길을 계속가고 있다.

## ② ‘하늘의 별들도 예측이 빗나간 북미 2차 하노이 정상회담’

1월 31일 스티븐 비건이 하노이 회담을 앞두고 스탠퍼드대에서 강연할 때 대담자 밥 칼린 “별들이 지금처럼 우리에게 유리하게 배치된 적이 없었다”고 언급.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 담당 국장 출신으로 대학 책임연구원인 칼린은 눈뜨면 북한 노동신문, 조선중앙방송 등을 들으며 오랫동안 북한 분석 해온 인물. 비건의 강연 못지않게 그의 전망이 주목. 김정은은 ‘영변’으로 통치려다 트럼프의 ‘영변+ $\alpha$ ’에 일격을 당해 ‘노딜’로 끝남. 북한 문제 예측이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사례.

## ③ 두 광인(狂人)이 만나면 광인이론도 약발없다.

니키 헤일리 전 주 유엔 미국대사는 11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트럼프가 북한이나 유엔 회원국들에게 ‘미치광이 전략’을 쓰라고 지시했다고 공개. 트럼프를 사이코패스로 보는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들이 모여 쓴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라는 책이 출간되고, ‘화염과 분노’가 미치광이 전략을 쓰는 것이 닉슨과 닮았다는 분석이 많았으나 내부 전직 관료가 확인한 것은 처음.

닉슨의 상대 호치민이 걸려들지 않은 것처럼 김정은도 ‘벼랑끝 전술’은 3대를 이어오는 전가의 보도임을 다시 증명. 북미가 3차 정상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을 위해 10월 4일 스톡홀름에서 만날 때 이를 전 SLBM을 발사한 뒤 회담 당일에는 노동신문에 “5천년 력사의 사변”이라며 SLBM 발사를 자축. 5일 회담 결렬 직후에는 준비한 듯 김명길 순회대

사가 “ICBM을 쏘지는 미국에 달려있다”고 한 것은 ‘하노이 양값음’하려고 나온 것이라는 분석도. 6월 30일 판문점에서 트럼프가 북한 땅을 밟으며 김정은 만났으나 ‘변개팅 쇼’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음. 하노이, 판문점, 스톡홀름 북미 접촉의 키워드는 ‘둘 다 ○아이들, 함부로 예측하지 마!’

#### ④ 문재인 의 짝사랑, 전략적 인내하는 배신의 한 해

하노이 노딜 다음날 文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미국과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의사를 밝혀 미국과 대북 공조 엇박자 논란. 워싱턴행 성과가 없자 김정은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 그만두라”고 포문 열기 시작.

8월 한미 지휘소 훈련을 두고 북 외무성 국장 담화에서 “청와대의 요란한 작태가 우리 눈에는 겁먹은 개가 더 요란스럽게 짖어대는 것”이라고 비판.

6·12 1주년 기념식은 남측에서만 열려.

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평화 경제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열겠다”고 ‘통일 경제’의 비전을 제시하자 조평동 대변인 담화로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할 노릇” “웃겨도 세계 웃기는 사람” “다시는 마주 앉을 생각도 없다”고 비난. 집권 민주당 대변인은 “노동신문에 게재 안해 수위 조절해 다행”이라고 논평.

8월 10일 오전 5시 34분과 50분 탄도미사일 발사는 문 대통령이 판문점 회담에서 김정은으로부터 직접 받은 ‘새벽잠’ 약속을 깨는 것. 북한은 발사 후 “안보를 잘 챙기는 청와대이니 새벽잠 자기는 글렀다”고. 문 대통령이 10월 31일 모친상 장례를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한 당일 오후 북한은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

조선중앙통신이 21일 김정은 부산 아세안 행사 불참 통보서는 대통령 친서까지 까발리며 훈계조. “간절히 초청하는 친서를 보내왔다. 모든 일이 시간과 장소, 들데 날데가 있다. 마른 나무에 물내기라고 북과 남이 만나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죄스러운 마음으로 삼고초려를 해도 모자랄 판국에, 형식 뿐인 상봉은 하지 않는 것 보다 못하다. 이치도 모르는 상대와 열백번을 만날들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

## ⑤ 북한이 쏘면 한미가 “괜찮다” 엄호. 김정은도 쑥쓰러운 시추에이션

5월 4일 이스칸데르급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도 국방부 ‘전술유도무기’라며 ‘미사일’을 입에 올리지 않아 ‘홍길동 군대’ 비판 자초. 닷새 후 문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몇 시간 앞두고 올해 2차 발사했으나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고 면죄부. 뿐 아니라 8일 후 800만 달러 규모 인도적 지원책도 발표.

트럼프, ICBM이 아닌 ‘중단거리 한반도 미사일은 오불관언’. 북한은 올해 단거리 미사일 3종 세트 완성을 포함해 미사일 신형방사포, SLBM 등을 다양한 장소와 비거리로 실험하며 12차례 발사 실험. 문 대통령은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은 군사합의 단 한 건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혀. 문 대통령, ‘김정은의 대변인’ 논란이 된 한 해.

## ⑥ ‘결별 쩐 남북정상 회동’

올해 들어 김정은의 답방이 몇 차례 화두.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김정은이 3월말이나 4월초 방문할



것에 대비한 경호를 준비하고 있는 보도가 나와. 특히 그의 친모 고용 회의 고향인 제주도 방문설. 백두산에 갔던 것에 대비해 한라산 등반을 위한 헬기장 건설 얘기도 나왔다. 이는 하노이 회담 결렬로 수면 아래로 잠수. 하노이 회담 결렬 당일까지도 회담 결과를 몰랐던 것처럼 북한 비핵화 진행 방향에 오리무중인데서 오는 희망사항에 의한 것.

문 대통령은 4월 워싱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도 김정은에게 전달할 만한 조치들을 받아와 남북 4차 회담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빈손 귀국. 남과 북이 트럼프와 하노이와 워싱턴에서 ‘노 딜’을 당해. 문 대통령은 워싱턴 빈손 귀국 며칠 후 김정은 입으로 ‘오지랴’ 소리 들어.

서훈 국정원장은 9월 국회에서 ‘불쑥’ 김정은이 11월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으나 역시 설익은 ‘희망사항’. 실현 가능성을 떠나 북에 강한 초청 메시지를 던진 것이거나, 내 부적으로 조국 사태 등으로 궁지에 몰린 정부가 남북 관계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도 해석. 김정은은 도와주지 않음

올해 남북 정상 회동은 있었으나 ‘결불 짚기’. 6월 하순 G20을 위해 오사카에 온 트럼프가 한반도에 1박2일 오는 중에 ‘번개탕’을 신청해 판문점에서 만날 때 회동.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북미가 회동할 때 문 대통령은 옆방에서 기다리는 사나운 모양새 연출.

## ⑦ ‘북한 눈치보기’도 정도가 있어야지

통일부가 6월 북한에 쌀 지원을 위해 세계식량계획(WFP)을 우회하는 ‘모수’를 내기도 했으나 북한이 7월 한미연합훈련 등을 이유로 거부, 정부는 9월까지 안받겠다는 쌀을 지원하기 위해 방법을 찾다 결국 무산. 주는 쪽이 제발 받아달라고 하는 형국.

북한이 10월 초까지 7차례 단거리 미사일 등 발사 후에 ‘겁먹은 개’

막말이 나온 뒤 정세현 전 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는 비핵화의 전조이자 군비 감축을 고려한 것”이라고 ‘옹호 해설’. 북한도 이런 해설 수긍할지 의문.

10월 평양에서 진행된 남북 월드컵 예선 경기는 ‘무관중·무중계·무득점’3無 경기로 진행. 외신이 ‘유령 경기’라고 비판. 김연철 장관은 “북한이 관중을 동원하지 않은 것은 공정성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북한을 두둔.

김정은이 10월 하순 금강산 관광 지구를 시찰한 뒤 “남조선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라”고 요구하고, 남측의 대면 협의도 거부하고 할 말 있으면 서류로 보내라고 요구. 김연철 장관은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의지를 나타내. 北의 속마음을 읽고 있는 것인지 추이가 관심. 이런 사례들에 비해 3차례의 목선 어선 선원 송환은 더욱 심각한 사안.

6월 15일 삼척항에 들어온 ‘목선 귀순’에 대해 축소 보고 등 여러 논란이 있지만 핵심은 북한 눈치보기. 청와대가 선박 귀순을 축소 은폐하려는 정황 다수 포착.

7월 동해 NLL을 넘어온 소형 부업선은 ‘흰색 천’을 매달아 귀순 의사가 있는 지 의문이 남은 가운데 신병 확보 37시간 만에 선원 3명을 모두 돌려보내 진상 파악이 어려운 상황.

11월 2일 선원 16명을 살해한 뒤 남으로 넘어왔다는 두 명에 대해서는 귀순 자술서를 작성했음에도 북으로 송환해 ‘북한 눈치보기’를 넘어 불한이탈주민법상 위배, 반인권 행위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정의용 안보실장은 11월 1일 국정감사에서 “북한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나경원 대표와 ‘우기지 말라’ 다툼을 벌이는가 하면,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는 ICBM에서 쓸 능력이 없다고 발언했다가 국정원장이 수정하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 기조는 북한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하려다가 나온 것들이 공통점.

## 북한 내부 정세: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안 정 식

(SBS 북한전문기자)

### [2019년 평가]

- 헌법 개정
  - 김정은 통치 공고화: 국무위원장에 국가대표 권한 부여
- 전통 우방, 중러와의 관계 강화
  - 김정은 방중, 시진핑 방북
  - 김정은 방러
- 김정은의 백두산 등정, 백두산 구상
- 하노이 결렬에 힘빠진 통전부, 부상한 외무성
  - 힘 빠진 김영철,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부상한 최선희

- 주요인사 교체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재룡 총리, 박태성 최고인민회의 의장
  
- 김여정 위상 변화
  - 의전은 현송월에
  
- 미사일 발사 재개, 신형무기 개발 실전배치
  -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태킴스, 대구경 방사포, 초대형 방사포
  - 북극성 3형 (SLBM), 신형 잠수함 건조 (3천톤급 추정)
  
- 자력갱생 강조
  
-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지속 강조
  
- 관광단지 개발 매진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금강산 현지지도
  
- 경제성장을 하락 속 전반적인 안정세
  - 제재 영향으로 경제성장률 지속 하락 2017(-3.5) 2018(-4.1)
  - 쌀값, 환율 등 큰 변동 없어
  - 식량사정도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관측 (국제기구 평가와는 편차)

## [2020년 전망]

### 1. '새로운 길' 택하나

#### 1) '새로운 길' 선택의 조건

연말까지의 북미협상 결과

#### 2) '새로운 길'의 구체화

2020년 신년사

당 중앙위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정치국 확대회의

#### 3) 김정은의 백두산 구상

김정은, 백두산 등정 보도 (2019/10/16)

“우리 혁명이 한걸음 전진될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

같은날(10/16) 보도된 삼지연군 현지지도 보도

“미국을 위수로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이 우리 인민앞에 강요해 온 고통은 이제 더는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그대로 우리 인민의 분노로 변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그 누구의 도움을 바래서도 그 어떤 유혹에 귀를 기울여서도 안된다고 하시면서 오직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길을 불변한 발전의 침로로 정하고 지금처럼 계속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

고나가야 한다고”

#### 4) 김정은의 ‘새로운 길’

- 대외관계 개선 당분간 보류한 자력갱생
- 자위적 국방력의 강화  
대미 전략무기 개발, 증강 (ICBM, SLBM)

## 2. 전략무기 실험 가능성

### 1) 무력시위의 선택지와 수요

- 핵실험
  - 6차핵실험 (2017/9/3)
    - : 수소탄 실험, ICBM 장착용
    - : “핵탄의 위력을 타격대상과 목적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높은 수준”
  - 추가 핵실험 수요 높지 않을 듯
- ICBM
  - 화성-15형 발사 (2017/11/29)
    - : ‘핵무력 완성’ 선언, 재진입 기술 검증 안 됨
    -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추가 발사 필요
    - 실거리 발사 필요한데 실거리 발사에 따른 부담

□ SLBM

북극성-3형 발사 (2019/10/2)

신형 잠수함 건조 마무리 단계, 신형 잠수함에서의 발사 필요  
준비되는 대로 언제든지 실행 가능

2) 무력시위의 목표

□ 미국 대선 국면을 활용한 ‘사실상의 핵보유국’ 위치 달성

트럼프가 재선되든 미국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든 북한의 핵포기는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게 만든 상태에서 미국과의 협상 추진

3) 무력시위 실행의 시기

□ ‘새로운 길’ 선택을 공식화할 경우 언제든지 가능

미국내 정치상황 조망하며 강약 조절

□ 미국 대선 직전 대형 도발 가능성

2020년 9/28 ~ 10/10

2020년 9/28일: 김정은 등장 10주년

(2010/9/28 3차 당대표자회에서 공식 등장)

2020년 10/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미국 대선(11/3) 한달 전

: 북한이 대형 도발해도 미국의 대응이 어려운 시기

이후 협상 모드로 전환해 미국 대선결과에 대비

### 3. 관광단지 개발을 통한 자력갱생의 성과 선전

#### 1) 주요 관광단지 완공 목표 시기

-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2019/12월 운영시작 목표 (김정은, 2019/8/31 현지지도)
-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2020/4/15
- 마식령스키장: 2013/12월 완공
- 금강산지구: 조만간 개발 착수, 주요 대상건설 사업으로 건설 독려

#### 2) 관광객 조달의 과제

- 2018년 방북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중국인이 90%  
(북한 관광총국 관광선전국장, 2019/7/11 신화통신)
- 중국, 시 주석 방북 이후 북한행 관광객 수 500만명으로 늘리도록 지시 (일본 아사히 신문, 2019/8/20)  
: 통일부, 근거 약한 것으로 보고 있어
- 중국 관광객 유치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으나 국제사회 제재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관광객 조달에 한계
- 결국, 북한 국내 관광객으로 시설 활용



최고지도자의 은덕을 인민들에게 베풀어주는 차원

#### 4. 기타

- 김정은 방중 가능성
- 종리와 관계강화 지속
- 자력갱생으로 경제개발 독려
- 먹고사는 문제는 근근이 해결 가능
- 9/28, 10/10 대규모 기념행사



## 미중관계: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이 상 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가. 미중관계 평가

#### 1) 미·중간 대외정책은 대립과 갈등 문제가 확산된 나선형

- 올해 들어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바,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2019.6.1.)”를, 중국은 “중·미무역협상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라는 백서(2019.6.2.)를 발표해 중·미간의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영향이 동맹국으로 번지고 있음.
-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하나의 중국원칙’을 수정하여 대만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對중국 3대 아킬레스건(남중국해문제, 인권문제, 대만문제)중 하나를 의도적으로 건드리고 있음.
-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23차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2019.6.5.-6.7.)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

하여 중러관계를 '신시대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격상시켜 중·러 관계를 공고히 하는 등 중·러·북간의 신냉전(냉전2.0)이 가시화 되고 있음.

- 중국의 급부상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축이 오바마정부의 '아시아 회기'에서 더 확장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진화되어 동아시아지역이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 주도의 중국 견제망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 방법은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임.
- 중국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 일본 등에게 '선택을 잘해야 한다'는 압력(인도-태평양전략 불참, 화웨이 제재 불참, 여행 및 상용 비자발급 제한)을 주면서 차이나 불링(bullying)을 전개하고 있음.

## 2) 정치체제와 가치관의 충돌로 인한 미중간 문명대립의 심화

- 중미패권전쟁은 동서양의 정치체제와 문화적 가치관의 모델경쟁으로 비화되어 서구 민주주의 미국에 대한 동양의 이민족인 중국 문명과의 충돌로 확산되고 있음.
- 미국의 대 중국 개입정책 추진에 인식적인 전제가 되어왔던 '경제적으로 발전된 중국이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정치체제가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중국공산당 19차 당 대회 및 2018년의 개헌 과정을 통해 깨지면서 미국은 중국과 수교 이후 다른 어느 시기보다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는 중임.
-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의 허드슨 연구소 연설(2018.10.4.)에서 "미국인들은 항상 대만의 민주주의 수용이 모든 중국인

을 위해 더 좋은 길을 제시했다고 믿는다”<sup>1)</sup>는 언급은 상당히 상징적이고 수사적 표현이었으나 미국의 정치 엘리트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이념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입장에서 대만문제는 중국을 공격하고 미국적 가치를 전파하는데 아주 중요한 현안 문제라 할 수 있음.

- 최근 카이론 스키너(Kirin Skinner)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은 지난 4월 2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래안보포럼’에서 중국과의 충돌을 “진정으로 다른 문명과 다른 이데올로기와의 싸움”이라며 “우리가 백인(Caucasian)이 아닌 대단한 경쟁자를 가지는 것은 처음”이라고 언급했음.<sup>2)</sup>
- 미국을 비롯한 서구 민주 국가들은 중국이 시장경제와 세계화의 자본주의 세계체제로 편입되면 서구 보편적 가치를 따를 것으로 전망했고, 기든 라흐만 파이낸셜타임스(FT) 칼럼니스트는 “서방 세력이 중국을 세계화와 무역으로 포용한 것은 경제적인 결정만은 아니었다”며 “중국이 세계화를 통해 서구의 정치적 가치(자유·민주주의·인권 등)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도 있었다”고 밝힌 바 있음( Finance Times, 2019.6.3., 칼럼).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제1회 ‘아시아 문명대화 대회 (2019.5.15.)’ 개막 연설에서 “자국 인종과 문명이 남보다 뛰

---

1) Vice President Mike Pence’s Remarks on the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China 2018[2019, July 1]. He remarked that America will always believe Taiwan’s embrace of democracy shows a better path for all the Chinese people.

2) 이상만, 美中 문명충돌, ‘야만의 시대’ 돌아가나, 아주경제, 2019.7.2. “This fight is with a really different civilization and a different ideology and the USA hasn’t had that before.”

어나다고 생각하고 다른 문명으로 개조하려거나 심지어 대체 하려는 생각은 어리석다”며 “평등과 존중의 원칙으로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서로 다른 문명과 교류와 대화로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각종 문명은 원래 충돌이 없었고, 문명 교류는 대등하고 평등해야 하며 강제적이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3) 양안관계의 불확실성에 대한 중국의 對대만 26개 우대조치 (26条措施) 제시

- 중국이 중시하는 국가적 아킬레스건은 대만문제, 인권문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홍콩자치문제, 경제문제 등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대만문제는 미국적 가치의 확장과 중국의 미완성 영토 통일이라는 궁극적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재, 봉쇄, 공존, 협력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
- 미국은 중국 견제라는 대전략 하에서 대만카드를 이용하여 중국을 자극하려는 워싱턴의 정책적 변화(대량전술무기 판매, 대만주요인사의 미국방문, 미국고위관료의 대만방문허용, 미해군 함정의 대만해협진입)가 기저에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항의와 반발(중국공군과 해군의 대만해협 무력시위)이 거세지면서 양안관계는 어려워지고 있음.
-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주석(汪洋)은 대만 총통 선거(2020.1)를 의식하여 대만 내 친중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국 정부가 대만의 기업과 개인을 우대하는 양안 경제문화 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26개 조치’(国务院台办, 《关于进一步促进两岸经济文化交流合作的若干措施》 2019. 11. 4.)<sup>3)</sup>를 발표하여 대만에 대

한 유화정책을 펼치고 있음.

#### 4) 체제저항운동으로 확산된 홍콩시위와 일국양제의 부정

- 홍콩시위 문제의 중심에는 중국이 강조해온 일국양제에 대한 신념이 희석되는 가운데 사실상 일국양제에 대한 교육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며, 양제는 교육했으나 일국 교육은 못한 교육적 가치관의 차이에서 발생한 체제저항운동으로 보임.
- 일국양제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이념교육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두 가지 제도(兩制: 사회주의 시스템, 자본주의 시스템)는 교육했으나 하나의 중국(一國) 교육을 제대로 못한 이데올로기 가치관 교육의 실패에서 그 저항운동의 원인을 찾아야 함.
- 차후 홍콩과 대만 문제의 중심에는 그간 중국이 강조해온 ‘일국양제’에 대한 신념위기가 발생하면서 저항을 받게 되었고, 홍콩은 대만과 연계하여 중국이 주장하는 이념적 가치관에 저항을 할 것이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들의 저항을 지지할 것으로 보임.<sup>4)</sup>

---

3) 26개 조치의 주요 내용은 ▲대만인은 해외에서 자연재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영사 보호와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외국에서 중국인과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으며, ▲중국 거류증이 있는 대만인은 중국에서 주택을 살 때 중국 본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며, ▲대만 운동선수들은 중국에서 축구와 농구, 탁구 등의 대회에 참가할 수 있고, ▲대만 기업이 주요 기술 장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중국의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 개발과 표준 제정, 네트워크 건설 등에도 참여할 수도 있으며, ▲대만 업체들은 중국에서 민간 항공과 테마파크 투자 및 소액 대출업체를 설립할 수 있고 자금 조달과 수출신용보험에서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하지만 중국은 홍콩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자국법(홍콩인권민주주의법안)에 근거해 함부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고, 중국의 일국양제와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훼손하려 한다”며 “이는 유엔 헌장과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홍콩문제를 미국의 행위를 내정간섭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음.
- 중국은 홍콩시위가 가중되자 홍콩·마카오·광둥성을 연결하는 거대한 단일경제권인 ‘웨강아오대만구(粵港澳大灣區: great bay area)’ 건설에서 홍콩을 대체할 ‘중국특색사회주의선도구(심천특구)’ 개발을 시작하고, 광범위한 개혁조치를 공개하면서 심천을 21세기 중엽까지 글로벌 벤치마크 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이 지역에 글로벌 본사와 지사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외와 홍콩의 인재를 유치하여 홍콩의 금융 허브기능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음.

## 5) 미중무역전쟁의 단계적 합의 결과 도출 가능성이 있음.

- 중미 양국은 2019년 4월까지 장관급 협상을 이어오다 2019년 5월부터 중국의 입장 후퇴에서 비롯된 분쟁 격화로 5~6월 및 9월 두 차례에 걸쳐 상호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본격적인 중미무역전쟁에 돌입함.

---

4) 미국정부는 1992년 홍콩정책법을 통해 홍콩특별대우 보장을 하여 왔는데 최근 미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연례보고서용 통해 중국군이 무력 개입할 경우 홍콩에 부여한 특별대우(관세, 투자, 무역, 비자발급 등)를 중단하는 내용의 관련법 제정을 의회에 권고했고, 미국 상원은 앞서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대한 신속처리 절차(패스트트랙) 추진을 논의한 후 상기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후 발효를 기다리고 있음.(SCMP, 2019. 11. 19)



-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5,745개 품목)에 부과하던 10%의 추가관세를 25%로 인상하였고(5.10), 중국은 60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5,140개 품목)에 부과하던 5~10%의 추가관세를 5~25%로 인상(6.1)함.
- 이후 미국은 새로운 1,12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3,229개 품목)에 대해 15%의 추가관세를, 중국은 기존 및 새로운 1,717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5~10% 추가관세를 부과(9.1)함.
- 또한 미국은 중국의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와 미국기업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5.15)하였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8.5)하는 등 양국의 무역전쟁은 기술 및 환율 영역으로 확산시킴.
- 2008년 9월부터 시작한 중미무역전쟁은 13차에 걸친 중미간의 협상을 거쳐 1년 4개월 만에 잠정적 합의에 다다를 것으로 보이며, 지난 9월 미국이 부과한 1100억불 상당 중국산 상품의 관세 15%와 중국이 부과한 750억불에 달하는 미국산 상품에 대한 10% 관세가 우선 없어질 가능성이 높음.

#### 미중무역전쟁 종결 시 미국의 對중국 단계별 요구사항 예상도

1단계	· 양국이 부과한 관세일부폐지(미국 1100억불, 중국 750억불)
2단계	·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근절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요구.
3단계	· 중국의 합의 이행을 강제할 법적이고 제도적인 안전장치의 성문화

- 만약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 홍콩민주화법안과 연동되어 중미 무역협상 및 담판의 결과가 중국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적으로는 2-3단계가 중미무역전쟁 종결을 위한 핵심사안 임.5)

## 6) 동맹국에 편승 강요하는 인도-태평양전략과 일대일로(BRI) 정책에의 참여 요구

- 미국은 동맹국에 대해 미국이 헌신한 대가에 대한 보상적 혹은 강요된 방위비 증액 요구하는 등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과정에서 동맹국들에게 편승을 강요함.
  -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정치·경제·안보 이익을 더욱 폭 넓게 추구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중국과 대면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며, 동 보고서는 “규범에 기초한 질서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여 공산당의 리더십 하에서 중국이 법치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의 가치와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함.
  - 지금까지 미국 주도 질서는 패권안정을 위해서 국제공공재를 제공해 왔지만 현재는 미국은 패권유지 비용의 상승을 감당하지 못해 그 결과로 미국의 패권이 쇠락하고 있으며, 미국은 다른 동맹 국가들의 희생과 공헌(동맹국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등 시혜적 패권이 강압적이고 약탈적인 패권으로 변화해감으로써 기존 동맹국가들과 갈등을 겪고 있음.
  - 중국의 급부상으로 미국의 외교정책축이 오바마정부의 ‘아시아 회귀’에서 더 확장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진화되어 동북아시아지역이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일본 주도의 중국 견제망을 구축하기 위해 한국을 끌어들이며 한미일 공동전선을 구축해야하는데 그 방법은 지소미아를 유

---

5) 미국의 대중국 요구사항은 1)지적재산권 보장 성문화, 2)위안화 평가절하 환율 임의조작금지, 3)국유기업 국고보조금 폐지, 4)기술이전 강요금지, 5)공산당 특유의 비관세장벽 철폐 등임.

지하도로 한국에 고강도 압박을 가하는 것임.

- 중국은 일대일로정책(BRI)을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는 지렛대로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 안정적 경제자원의 공급 및 해상 제해권의 장악을 통해서 21세기 중국판 국제질서를 구축하려고 함.
  - 중국은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자원의 확보, 안정적 자원이동 루트인 해양수송로의 확보, 해양주권과 해양자원의 확보와 연관된 영토분쟁 등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 전력을 강화하고 공격적인 해양팽창 성향을 표출하고 있음.
  - 미국의 전략적 봉쇄, 일본의 전략적 교란, 인도의 전략적 비협조 등 강대국들은 일대일로에 대한 경계심과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으며, 주변국의 경우에도 자국의 경제건설에 소요되는 자금, 기술, 무상원조에 대한 기대심리와 함께 대중 의존도 심화에 대한 우려 또는 경계심을 노출하고 있음.

## 7) 미·일·호주에 의한 對중국 경제포위정책인 푸른 점 네트워크(Blue Dot Network)의 등장

- 중국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에 맞서 미국은 '푸른 점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발표함과 더불어 일본, 호주 등과 연계하여 후진국 인프라 개발에 나섬으로써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나타냄.
  -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태국 방콕에서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을 열고 '푸른 점 네트워크 프로젝트'<sup>6)</sup> 추진을 공식 선언했

음(2019. 11. 4.).

- 미국은 향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맞서 아태 지역 투자와 교역을 더 늘릴 계획이며, “미국은 (아태 지역에서) 군사·지정학적 지위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며 “영구적으로 이곳에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하였음(2019. 11. 4.).
- 중국관영 글로벌타임스(2019.11.5)는 “일대일로 구상은 어떤 국가의 프로젝트와도 경쟁을 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미국의 푸른 점 네트워크가 중국을 겨냥하고 아태지역 국가들의 분열을 조장한다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주장함.

## 나. 2020 미중관계 전망

- 미중 갈등은 중국의 부상과 따른 글로벌 레벨의 구조적으로 형성된 패권경쟁 문제이기 때문에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필요하며, 쌍방이 핵심이익을 두고 대치적인 관점에서 분석해야 함.
- 중·미간의 전략적 패권경쟁이 무역(관세), 기술(지재권), 통화(환율)분야 등 전 경제분야에서 복합적 경제전쟁으로 확산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가치관과 문명의 갈등으로 진화되고 있어 중미 통상분쟁(경제문제)은 글로벌 패권경쟁의 물질적 기초이므로 이제부터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인식해야함.
- 특히 홍콩민주화 시위, 양안관계, 남중국해 영유권과 한반도

---

6) 푸른 점 네트워크는 미 해외민간투자공사(OPIC),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 호주 외교통상부(DFAT)가 함께 진행하는 공동 프로젝트로써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세계에서 지속 가능한 인프라 개발을 목표로 함.

문제는 중·미관계에서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핫스팟 (Hot Spot)’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국지적 충돌과 냉전2.0 영역이 될 것임.

- 물론 미·중간에 근본적인 패권유지와 패권도전 문제에서 모순이 발생하여 충돌하고 있지만 냉전시대의 미소대결 양상과는 달리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고 있는 상황이며 다방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되어 있음.
- 중·미 갈등 시기 양국 간의 무역전쟁과 북핵 문제도 양국이 협력하여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확장되고 있으며, 중·미간 경쟁의 최정점에 있는 홍콩과 대만문제 역시 극한 대립상황으로 확산되지는 않고 중·미 양국이 핵심이익을 두고 타협점을 찾아 점차 수렴해 갈 것으로 보임.
- 신경제포럼(2019.11.22, 신화사)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미간의 무역전쟁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다’, ‘우리는 필요하면 반격할 것이지만 무역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왔다’, 중미 양국은 전략적인 문제에서 소통을 강화해 오해와 오판을 피해야 한다’라고 언급함으로써 중미간 전략적 소통강화와 극한 충돌상황의 완화를 원하고 있음.
- 시장경제질서 확립은 소유구조,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모두가 추구하는 경제문제(생산물의 종류와 양, 생산방법, 분배문제)를 해결하는 유용한 도구이기 때문에 중국은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개방형 자유 무역 시장경제질서’와 중국형 안보공동체 건설을 위한 ‘다자협력형 안전보장질서’를 주장하는 대외정책을 전개할 것임.



## 한일/북일 관계: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2019년 평가

- 한국을 멀리하고 북한에 가까이 다가가는 아베 총리의 남원북근(南遠北近) 정책
  - 외교청서나 아베 총리 연설에 나타난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불신감은 2015년 12월의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근본적 원인
  - 1월 28일 국회 시정방침연설에서 이례적으로 한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만날 용의가 있음을 재차 표명
  - 4월 23일 각의에 보고된 2019년판 외교청서는 대법원 판결, 화

해치유재단 해산 발표, 제주 국제관함식에의 자위대 불참, 한국 해군의 레이더 조사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한국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져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

- 반면, 북한에 관해서는 2018년판에 포함되어 있던 ‘지금까지 없었던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란 표현이 빠지고 “유엔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등 모든 수단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최대한 높여 간다”는 표현도 삭제
  - 납치문제 해결 없이 국교 정상화 있을 수 없다는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국제사회의 압력을 수단으로 납치문제의 해결을 북한에 요구해 간다”는 표현이 빠져 아베 총리가 주체적인 해결을 위해 나설 것을 암시
  
- 9월 27일 각의에 보고된 2019년판 방위백서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군사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한국과 관련해서는 서술 분량도 줄고 부정적 평가 증가
  -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해 핵무기의 소형화, 탄두화를 이미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처음으로 지적하면서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체계인 이지스어쇼어의 도입 필요성을 정당화
  - 북한이 이동식발사대(TEL)나 잠수함을 이용해 일본을 기습 공격할 수 있고, 또 복수의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북한의 군사 동향은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미사일 방어체제의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



- 한국과의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한국 측의 부정적인 대응이 방위협력, 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미국을 제외하고 안보교류가 활발한 국가의 순서를 나타내는 ‘안보보장협력’의 장에서 2018년까지 호주에 이어 두 번째로 서술되었던 한국은 인도와 ASEAN에 이어 네 번째로 후퇴
- 방위성은 2020년 방위예산으로 과거 최대인 5조3000억 엔을 계상했으며, 2013년 이후 7년 연속 증가(3월 5일 중국 정부가 공표한 2019년도 중국 국방비는 전년도에 대비 7.5% 증가한 약 1조1900억 위안(199조8000억 엔)으로 미국에 이어 2위로 2019년 일본 방위비 5.2조 엔의 3.8배로 중일 간 군비경쟁 우려)

#### □ 역사, 통상, 안보 등 심각한 복합갈등에 직면한 한국과 일본

- 2018년 10월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에의 배상명령 판결 이후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 간 대화보다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역사문제 이외에 통상과 안보 문제로까지 비화되어 복합적인 갈등 양상이 노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안 해결을 위한 허들을 서로 높임
- 2019년 1월 9일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이 이수훈 주일대사를 불러 한일청구권협정에 의거 정부 간 협의를 요청한 데 이어 5월 20일 일본 정부는 설치를 한국 정부에 요청
- 6월 19일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확정판결 피해자에게 배상하자는 한국 정부 안을 즉각 거부한 일본 정부는 제3국만으로 구성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 정부에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음

- 한국 정부는 3권 분립 원칙에 입각해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수세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되었다면서 한국 정부가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는 강경 입장 고수

-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관리제도의 엄격한 운용 방침을 발표하고 8월 22일 한국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종료 방침을 결정하면서 한일갈등이 통상과 안보, 나아가 국민감정 문제로 비화
- 지소미아 종료는 문재인 대통령과 진보 진영의 지론이며 한미일 3국 연계에 대한 평가도 낮아 종료 이후 한일 국방 당국 간 대화에 지장을 초래하고, 미사일과 잠수함추적훈련 및 해난구조훈련 공동실시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며, 나아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연계에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음

#### □ 지소미아 종료 직전 파국 회피한 한일 양국의 극적인 합의

- 한일 및 한미일 연계의 필요성을 공유했던 한일 양국은 비공개 외교적 협의를 계속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와 관련해 자국이 취할 조치를 각각 발표해 파국을 회피
- 이번 합의로 한국은 지소미아의 연장과 현명한 대응을 강조했던 미일 양국 입장을 무시하고 파기했다는 정치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나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국내 지지자들의 비판에

더해 지소미아 종료에 관한 협정문의 변칙적 해석이라는 부담을 떠안게 됨

- 한국 정부의 조건부 지소미아 종료 정지 결정에 대한 일본 국내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한일 간 합의에 관해 일본 측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되면서 파열음을 내고 있어 전도를 예단할 수 없음
  - 아베 총리와 고노 방위성은 북한 포함한 안보상황 고려한 전략적 판단(결정)이라고 언급한 반면, 아베 총리는 지소미아 유지 결정 직후 주위사람들에게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아주 강해 한국이 물러섰다는 이야기다”라고 실언 (아사히신문, 2019.11.24.)
  - 고노 다로 방위상(22일)은 “종료 통보 정지는 일시적인 것으로 이해, 방위성으로서서는 제대로 된 형태의 연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미일 3국이 연계해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처하고 싶다”
  - 이번 합의는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로 성립된 것이 아니라 양측이 기존 방침을 견지하면서도 조금씩 상대방 입장을 배려해 이뤄진 것으로 양국관계의 국면전환 기회가 될 수 있음

□ 여론과 유리된 아베 총리의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의사

- 5월 1일 보수적인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와 함께 전제조건 없는 정상회담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북한이 중시하는 과거청산문제도 논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지만, 실현 가능성이나 국민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

- 5월 11-12일 TBS 계열의 JN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북일 정상회담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이 62%였으며 가능한 빨리 개최해야 한다는 응답은 27%에 지나지 않았으며, 특히, 아베 총리가 '납치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정상회담' 등의 전제조건 없는 정상회담 추진 의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이 45%로 '납득할 수 있다' 40%보다 5%p 높았으며, 10월 초의 같은 조사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2%p 증가하고 '납득할 수 있다'는 3%p 감소

○ 아베 총리의 대북 유화 제스처를 무시하는 북한

- 가네마루 신 전 자민당 부총재의 차남 가네마루 신고 씨를 비롯한 방북단이 9월 14일-19일 평양을 방문해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 담당대사와 박경일 대외문화연락협회 부위원장, 류명선 조선노동당 부부장 등과 면담했는데, 송일호 대사는 민간 차원의 교류에는 적극적으로 응할 자세를 보이면서도 전제조건 없는 정상회담이나 정부 간 대화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
- 5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북한은 12차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9월 10일까지 일본은 비교적 억제적 반응을 보였지만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낙하했던 10월부터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엄중히 항의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했으며 북한도 그런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응수

## 2020년 전망

### □ 최장수 총리로서의 정치외교 유산 만들기에 주력

- 2018년 9월 자민당 총재 3선 달성 이후 아베 총리는 '전후 일본 외교의 총결산'과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방침에 입각 새로운 시대의 근린외교를 강력하게 전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함
- 러시아와는 경제협력을 지렛대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영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베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통산 27회, 올해만 세 번의 정상회담을 개최했지만 '두터운 신뢰 관계 구축'이라는 수사 이외에 진전은 없었지만, 이런 정책 기조는 2020년에도 유지될 것이나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아베 총리는 2020년 봄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방일을 중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만들 생각이며 그 성과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양국관계를 규정하는 제5의 문서인데,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관한 교섭은 난항이 예상됨
- 아베 총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헌법 개정인데, 7월 실시된 참의원 선거 결과 헌법 개정에 우호적인 의원 수는 발의에 필요한 재적의원 총수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함
  - 일단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 다시 헌법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은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중의원 해산

과 동시에 국민투표에 회부할 가능성도 있으며, 찬반양론으로 엇갈린 국민 여론과 제9조 개정에 공명당이 신중한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제9조를 제외한 다른 항목을 우선 개정한 뒤 제9조 개정을 과제로 남기는 방안도 선택지 가운데 하나임

## □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 모색 가능성

- 2020년 7월에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는 2020년 아베 총리의 최대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 정세의 안정이 필수적인 요소
  -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일본이 두 번 개최하는 2020년 7월의 도쿄올림픽의 성공은 최장수 아베 총리의 유일한 업적이 될 수 있으며, 2020년 7월 도쿄올림픽의 성공과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추진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을 한일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함
  - 영도문제담당상을 겸하는 에토 세이이치 1억총활약담당상은 자민당 내 초강경 보수파이며, 매년 2월 22일 시마네 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는 이름)의 날’ 기념식 전에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그러나 무엇보다 양국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의 단기간 해결이 곤란한 만큼 이 문제가 다른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2020년 봄에 이뤄질 수 있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이 이뤄지지 않도록

강제징용판결 원고 측을 설득하여 중단시키는 것이 급선무

- 안전보장 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는 한일 양국과 동아시아 지역 질서의 불안정 요소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한일 양국의 협력방안, 나아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일본의 인도태평양구상 등 양국의 외교안보·국가전략의 핵심에 관한 외교·국방 각료급의 전략대화(2+2), 나아가 한미일 3국의 외교·국방 각료급의 전략대화(2+2+2)를 시작할 필요

- 북한과 러시아의 첫 번째 전략대화 후 11월 21일 라브로프 러시아 외상은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중러의 공동행동계획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힘

- 또한, 2018년 12월의 동해상에서 발생했던 한국 해군의 레이더 조사와 일본 자위대의 저공비행 위협 같은 사태가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또는 외교적 현안으로 발전하지 않고 상호이해와 상호신뢰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한일 양국 국방(방위) 당국 간의 메커니즘 구축이 필요

#### □ 북일 정부 간 직접 대화보다 민간교류 확대 통한 환경조성

- 북일 관계정상화는 아베 총리가 목표로 내세운 ‘전후 일본외교의 총결산’의 중요한 축이지만, 2020년에 급격한 관계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움

- 올해 9월까지 비교적 북한에 대한 아베 총리의 발언이 억제적이

있던 데 비해 10월 두 차례의 북한에 의한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이에 대해 11월 초 송일호 대사가 아베 총리를 인신공격했던 점,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관계의 진전 없이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내년 전반 기까지 북일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지만, 민간교류는 확대해갈 것임

- 베이징 대사관 등 기존의 접촉 창구를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 기타무라 국가안전보장국장이 다시 비공개 접촉에 나설 가능성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납치문제에 관한 의미 있는 접근이 이뤄지면 2020년 7월 24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음

○ 비핵화를 위한 북미협상이 연내에 개최되지 못하거나 연내에 북미협상이 실현되도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20년 신년사에 한미일 3국에 대한 비판이 포함될 가능성이 농후해 2020년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는 매우 불안정해질 것임

□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에 대한 피로감 분출로 정치적 위기 직면 가능성

○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정권 등장 이후 안정되고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아베 1강 체제의 피로감이 각 분야에서 나타나 도쿄올림픽 개막 이전에 일본 국내에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음



- 아베 총리의 독주는 당과 내각의 공천권과 인사권의 완전한 장악과 자민당 내 민주주의의 고사(枯死)를 가져왔으며 3권분립에 의한 견제와 균형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
  
- 정치적 위기 타개를 위해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과 총선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자민당의 조직력과 야당의 낮은 지지율과 수권 능력 결여로 정권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아베 총리의 불명예 퇴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주시 필요



## 북미 협상: 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김 동 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 2019년 북미 비핵화 협상 및 북미관계 평가

- 싱가포르 합의가 북한에게 유리하였다면 하노이는 싱가포르 이후 북미협상의 불리함을 리셋하고자 했던 미국의 판정승으로 협상 결과 측면에서 불균형 존재
  - 북한은 충격에 가까운 결과이지만, 미국은 실보다는 득이었던 회담으로 회담 전 분열과 혼란의 미국대외정책결정메커니즘이 회담 후 일시분란, No Deal에 대한 여야 및 전문가 막론하고 폭넓은 지지 형성
  - 북한은 하노이회담에서 제재를 일찍 내민 전략적 오판과 함께 영변 범위의 모호와 영변 이후에 대한 비핵화 최종 단계에 대한 불명확한 입장이 결정적 패착
  - 하노이회담 이후 상황은 미국이 북미협상의 시계를 자신들에게 불리한 잘못된 합의로 인식한 6월 12일 싱가포르 합의 이

전인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한 5월 24일로 리셋

- 미국의 '동시적, 병행적'(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vs. 북한의 '동보적, 계단적'(simultaneously and phased)의 간극과 함께 북미간 비핵화 프로세스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동결의 해석차가 드러남
  - 미국은 모든 핵시설과 핵개발 프로그램, 이미 생산한 핵물질과 핵탄두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과 화생무기를 포함한 WMD(대량살상무기)와 핵기술 관련 인력까지를 포함하는 소위 일괄 타결, 빅딜, '완전한 해법(total solution)'을 통해 우선 북한의 비핵화 최종단계의 모습을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히 하고 난 후 이를 동시적 병행적으로 하자는 것
  - 북한은 구체적으로 비핵화 최종단계 포함사항을 처음부터 모두 내놓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하나씩 꺼내고 이를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것으로 북미 모두 적게 주고 많이 받으려 한다는 점에서 상호 요구하고 실제 내주는 비핵화와 상응조치 간 등가성에 대한 북미간 간극이 큼
  - 미국이 6월 30일 판문점 상봉 이후 미국이 요구하는 동결 범위는 단순히 영변 핵시설은 물론 영변 밖의 모든 핵 프로그램의 동결뿐만이 아니라 대량살상무기(WMD)의 동결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조건임.
  
-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결과에 대해 북미간 견해차를 보고 있으나 이후 북미관계 전개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
  - 미국은 북미 상호간 차분한 분위기에서 상호 요구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고 대화분위기 역시 나쁘지 않았다고 평가

- 그러나 북한 김명길 대표가 북미실무회담 결렬을 밝히며 북한이 요구한 계산법을 미국이 하나도 들고 나오지 않았다고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3차 북미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탐색 차원의 주도권 확보 및 기싸움 차원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제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준비된 행동

#### □ 2020년 북미 비핵화 협상 쟁점 및 전망

- 향후 북미협상은 북미 상호 요구하는 ‘+a’에 맞추어 ‘+a 딜 게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만 ‘영변+a’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도 ‘싱가포르+a’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새로운 계산법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장치의 제거로 싱가포르 선언의 1조, 2조와 관련된 연락사무소와 종전선언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것임.
  - 김명길 대표 발표 내용 중 “싱가포르 조미 수뇌회담 이후에만도 미국은 열다섯 차례에 걸쳐 우리를 겨냥한 제재 조치들을 발동하고 대통령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마저 하나둘 재개했으며 조선반도 주변에 첨단 전쟁 장비들을 끌어들이 우리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공공연히 위협하였습니다.”는 언급에서 새로운 셈법 즉 ‘+a’가 결국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추가 제재문제로 보임
  - 북한은 미국에 대해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지난 싱가포르 정상회담시 합의문에 담기지는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구두로 언급하고 약속한 비공적인 사안의 준

수 및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더 이상 말이 아닌 서면으로 보장하는 명시적이고 확실한 액면가를 요구

- 김정은과 트럼프 모두 상호 미치는 대외적인 변수 이상으로 대내적인 변수가 크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쌍방 모두 올해 내 되돌릴 수 없는 북미관계의 필요와 중요성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1~2차례 실무회담과 함께 연내 또는 2020년 연초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열려있음
  - 트럼프는 내년 대선 기간 중 북한문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상유지가 필요한 반면 과도한 진전은 미이행시 오히려 부정적일 수 있음
  - 김정은 위원장은 올 연말까지 미국과 협상에 시한을 제시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이 경제개발5개년 전략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그 이전 제재 해제가 아니더라도 경제에 매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안보환경 제공 측면에서 일정 수준의 진전이 필요한 상황임
  - 북미관계가 최소한 현 상황보다 더 나빠지지 않고 현상유지 관리만 된다고 해도 미국은 트럼프가 재선되든, 새롭게 누가 되든지 간에 2021년 전반기 새 정부의 진용이 갖추어지고, 북한은 2020년 경제개발5개년전략을 평가하고 2021년 4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2021년 6~7월부터 북미협상의 2라운드 시작이 가능함
  
- 예상되는 2020년 북미관계와 비핵화프로세스 진행 상황은 총 4가지 시나리오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의 정치상황과 북한의 새로운 길 모색 등의 상황을 고려시 노딜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됨

- ① 빅딜 : 트럼프가 국내정치위기를 극복하고 재선 가도에 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북핵협상을 타결 지으려 할 가능성. 북한 입장에서 오히려 트럼프 탄핵이나 재선 여부와 상관없는 북한이 원하는 체제안전보장이나 북·미 수교 등 지속 가능한 포괄적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미 의회 지지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 미 국내정치 상황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움
- ② 미들딜(상호 ‘+a’ 합의) : 양측 모두 만족하는 적정 수준의 합의와 이행으로 소위 우리 정부의 ‘굿이너프딜(good enough deal)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임. 만약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를 바탕으로 1년6개월간의 차분한 이행으로 되릴 수 없는 북미관계 마련 가능한 가장 희망적 시나리오  
\* 양측 모두 과거와 같이 시작점으로 되돌아가는 북미관계를 만들지 않기 위해 먼저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연락사무소 개설(싱가포르 1조), 평화(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 개시(싱가포르 2조), 모든 핵프로그램 동결과 영변폐기(싱가포르 3조, 9월공동성명5조2항) 그리고 추가로 한미연합훈련의 지속적 중단과 비핵화 진행상황에 따라 제재 유예/예외 조치 진행이라는 구체적 이행의 시작점(입구)을 담은 포괄적 합의가 필요
- ③ 스몰딜 : 빅딜을 했다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아무런 합의도 못 할 경우 내년 대선 국면에서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한다면 지금까지 트럼프대통령이 내세운 업적이 모두 사라지고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핵프

로그래 동결과 일부 제재 해제와 같은 일정 수준의 합의로 일시봉합 가능성

- ④ 노딜 : 빅딜은 미국 국내 정치 상황 상 정치 양극화 심화로 북핵 관련 초당적 협력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스몰딜을 할 경우에도 트럼프가 북한문제를 국내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추가적인 합의 없이 현상유지에 만족할 수 있음. 거기에 기존 북한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 온 인사들이 다시 전면에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협상 결렬과 북미관계 악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자료집 발간 목록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 (1995. 12)

제 목: 통일·안보정책의 회고와 전망

발표자: 강영훈(전국무총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 (1995. 12)

제 목: 통일·안보정책의 회고와 전망

발표자: 노신영(전국무총리,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 (1996. 3)

제 목: 대북정책의 기초 - 포용정책 및 비포용정책

발표자: 이동복(전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윤영오(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토론자: 전정환(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 소장)

김영호(중앙일보 전문기자)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 (1996. 4)

제 목: 한반도 평화체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남북한 당사자 원칙, 북-미협정, 혹은 다자간 해결?

발표자: 백진현(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토론자: 우재승(세계자유민주연맹 사무총장)

이장희(외국어대 법학과 교수)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5 (1996. 6)**

제 목: 4차회담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발표자: 정태익(외무부 차관보)

김도태(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임동원(아·태 평화재단 사무총장)

리영희(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6 (1996. 10)**

제 목: 남북한 경제협력 -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발표자: 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 소장)

토론자: 서진영(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고려대 교수)

이 호(남북대화사무국 자문위원)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7 (1996. 12)**

제 목: 남북한 관계의 전망과 한국의 선택

발표자: 박종철(민족통일 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양영식(통일원 자문위원)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8 (1997. 3)**

제 목: 잠수함 사건·사과'이후 바람직한 대북정책

발표자: 이상우(서강대학교 교수)

신정현(경희대학교 교수)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9 (1997. 6)**

제 목: 통일·안보 정책과 미디어의 역할

발표자: 김정서(동아일보 논설위원)

한중광(KBS 통일방송연구소 소장)

김용호(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정치학 박사)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0 (1997. 9)**

제 목: 김정일 권력승계와 북한의 대남정책  
발표자: 전현준(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1 (1997. 11)**

제 목: 북-미 관계 / 한-미 관계의 현안과 쟁점  
발표자: 홍규덕(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2 (1998. 1)**

제 목: 새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의 향방  
발표자: 정세현(민족통일연구원 원장)  
곽태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3 (1998. 4)**

제 목: 정경분리원칙: 대북정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발표자: 권오기(전 부총리 겸 통일원 장관)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4 (1999. 2)**

제 목: 1999년 남북한 관계: 북한 변화의 폭, 속도 그리고 방향?  
발표자: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조동호(KDI 연구위원)  
차영구(국방부 대변인)  
안병준(연세대 정외과 교수)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5 (1999. 6)**

제 목: 한·미·일의 대북정책: 공조체제의 문제점 및 전망

발표자: 김재홍(동아일보 논설위원)

박건영(가톨릭대학교 교수)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6 (1999. 7)**

제 목: 페리 방북 이후 남북한 관계 전망

발표자: 이현경(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한(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7 (1999. 10)**

제 목: 페리 보고서 발간 이후의 남북한 관계 전망

발표자: 홍관희(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장달중(서울대 교수)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8 (2000. 3)**

제 목: 2000년대의 남북한

발표자: 서대숙(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미국 하와이대 석좌교수)

이상우(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19 (2000. 5)**

제 목: 정상회담과 남북한 관계

발표자: 전인영(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임강택(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0 (2000. 10)**

제 목: 정상회담 이후의 북한

발표자: 서대숙(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박제훈(인천대 무역학과 교수)

강성윤(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1 (2000. 11)**

제 목: 북-미 관계의 현황과 전망

발표자: 박동환(미국 Northwestern대학 교수)

서주석(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서동만(외교안보연구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2 (2001. 2)**

제 목: 북한의 개방

발표자: 서진영(고려대 정외과 교수)

오승렬(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3 (2001. 5)**

제 목: 북·미 관계의 현황과 전망

발표자: 장달중(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4 (2002. 2)**

제 목: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관계 전망

발표자: 장달중(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5 (2002. 8)**

제 목: 최근 북한의 정세, 어떻게 볼 것인가

발표자: 김연철(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류길재(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실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6 (2002. 11)**

제 목: 북한 핵문제와 북·미관계

발표자: 고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전재성(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7 (2003. 5)**

제 목: 한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문제

발표자: 권만학(경희대 국제지역학부 교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8 (2003. 9)**

제 목: 6자회담의 평가와 전망

발표자: 고병철(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29 (2003. 10)**

제 목: 이라크 파병과 한미동맹

발표자: 김재홍(경기대 정치대학원 교수)

조 민(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0 (2004. 4)**

제 목: 현단계 남북경협의 쟁점과 과제

발표자: 조동호(KDI 북한경제팀 선임연구위원)

오승렬(한국외국어대 중국어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1 (2004. 6)**

제 목: 21세기 한국 대외전략의 방향

발표자: 이수훈(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전재성(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2 (2004. 11)**

제 목: 美 대선과 한반도 전망

발표자: 김기정(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봉근(평화협력원 원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3 (2005. 5)**

제 목: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

발표자: 김근식(경남대 정치언론학부 교수)

김용호(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4 (2005. 7)**

제 목: 제4차 6자회담의 방향과 전망

발표자: 홍현익(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김원수(외교부 외교정책실 정책기획관)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5 (2005. 10)**

제 목: 북핵 타결 이후: 쟁점과 과제

발표자: 서동만(상지대 교양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6 (2006. 7)**

제 목: 2006년 6월 한반도: 정세와 해법은?

발표자: 백낙청(6.15공동위원회 상임대표, 서울대 명예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7 (2006. 9)**

제 목: 작통권 환수 논란, 합리적 대안은 없는가?

발표자: 조성렬(국제문제조사연구소 기획실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8 (2007. 4)**

제 목: 2.13 합의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발표자: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전 통일부 장관)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39 (2007. 10)**

제 목: 제2차 남북정상회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발표자: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0 (2008. 11)**

제 목: 11.4 미국 대선 결과와 한반도

발표자: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1 (2009. 2)**

제 목: 2009 한반도 정세: 변화와 과제  
발표자: 김기정(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장)  
김연철(한겨레평화연구소장)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2 (2009. 4)**

제 목: 최근 북한의 정치동향과 향후 권력체계 전망  
발표자: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전현준(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보고서 No. 43 (2009. 7)**

제 목: 한미동맹의 미래와 현실  
발표자: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종철(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4 (2009. 11)**

제 목: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발표자: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김준형(한동대 국제어문학부 부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5 (2010. 3)**

제 목: 6자회담의 현주소와 전망  
발표자: 이수혁(전 주(駐)독 대사/6자회담 수석대표)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6 (2010. 12)**

제 목: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 전망과 과제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7 (2011. 3)**

제 목: 천안함 이후 1년: 한반도 정세와 과제

발표자: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양무진(북한대학원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8 (2011. 7)**

제 목: 발리 회담 이후 6자회담과 남북대화: 전망과 과제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49 (2011. 11)**

제 목: 남북 정상회담 가능한가

발표자: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정영철(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0 (2012. 5)**

제 목: 한반도 정세와 2013년 大전망

발표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승환(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류길재(북한대학원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1 (2012. 8)**

제 목: 김정은 체제의 북한, 어디로 가는가

발표자: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2 (2013. 5)**

제 목: 한반도 위기, 출구전략 가능한가

발표자: 김준형(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3 (2013. 8)**

제 목: 박근혜 정부 6개월의 평가와 전망

발표자: 고유환(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4 (2014. 2)**

제 목: 격랑의 동북아와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외교

발표자: 이상현(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최종건(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5 (2014. 4)**

제 목: 김정은 권력 체제의 변화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발표자: 현성일(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6 (2014. 11)**

제 목: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 체계 배치와 한반도 안보

발표자: 권명국(전 방공포병사령관)

김흥규(이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7 (2015. 5)**

제 목: 남북관계의 과제와 해법 모색

발표자: 유호열(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근식(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8 (2016. 4)**

제 목: 유엔제재 이후 북한핵문제의 국제정치

발표자: 이동선(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동률(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

박인휘(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59 (2016. 11)**

제 목: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 등장과

한국의 외교·안보 및 남북관계 전망

발표자: 이동선(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주석(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0 (2017. 12)**

제 목: 2017-2018년 격변의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

패 널: 김연철(인제대 통일학부 교수)

양문수(북한대학원대 교수)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 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희옥(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창수(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1 (2018. 4)**

제 목: 2018년 남북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과제

발표자: 박종철(통일연구원)

조성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양문수(북한대학원대학교)

###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2 (2018. 12)**

제 목: 전문가들이 보는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전망

발표자: 신석호(동아일보 디지털뉴스팀장)

김현경(MBC 통일방송추진단장)

장용훈(연합뉴스 한반도부장)

이제훈(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왕선택(YTN 통일·외교전문기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3 (2019. 7)**

제 목: 북미관계 전망과 남북관계 추진 방향

발표자: 황 지 환(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최 용 환(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통일전략포럼 자료집 No. 64 (2019. 8)**

제 목: 한일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나?

발표자: 이 수 훈(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회원가입 안내

### ▣ 회 비

#### ● 1년 회비

일반회원 : 50,000원, 학생회원 : 30,000원, 기관회원 : 100,000원  
재 가 입 : 회비 만기일 1개월 전에 회비를 재납부하시면 됩니다(안내문 발송함).

#### ● 평생회비

개인평생회원 : 100만원 이상  
기관평생회원 : 300만원 이상

#### ● 납부방법 : ① 연구소에 직접 납부

② 우체국 온라인 : 014233-05-000905 (예금주: 경남대학교)

### ▣ 회원의 혜택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와 심포지엄 등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본 연구소-북한대학원대학교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Asian Perspective』와 『한국과 국제정치』, 『현대북한연구』, 『동북아연구』를 포함, 소식지 등의 간행물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 본 연구소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대출,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출판도서 구입시 30%의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평생회원에게는 무료 기증)

### ▣ 회원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03053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15길 2(삼청동)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회원 담당자: 조인정  
전화 : 3700-0726, 팩스 : 3700-0722  
E-mail: minju@kyungnam.ac.kr  
Homepage: <http://ifes.kyungnam.ac.kr>

※회원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본 연구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신청하시거나 담당자에게 전화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